

5 0 +

리포트

2 0 2 1

특별호 vol.24
중장년 정책의 필요성,
그 특별함

1호 vol.25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동참하는 50+세대

2호 vol.26
50+ 1인가구와
돌봄에 관한 고찰

3호 vol.27
포스트 코로나, 50+세대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며

4호 vol.28
위드 코로나 시대
50+세대의 지원 방향

50+리포트는 서울시 50+세대가 새로운 인생 2막을 설계하고
제2의 전성기를 보낼 수 있도록 최신 국내외 50+동향과 다양한 오피니언을 전달합니다.

Volume24

중장년 정책의 필요성, 그 특별함

대전환 시기의 중장년 정책의 의의와 방향 정철영	06
은퇴자를 위한 정책도 대책도 없는 재앙을 막으려면 최종걸	09
포스트 코로나,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역할 최영준	12
내가 지켜본 서울시50플러스재단 5년의 변화와 당사자로서의 제안 김수동	16
새로운 노년문화가 필요하다 김은형	21
한국형 뉴딜 정책 안에서 발견하는 50+일자리의 가능성 남경아	24
포스트 코로나, '전환'에 직면한 50+세대의 현재, 그리고 미래 황윤주	28

Volume25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동참하는 50+세대

이슈 PICK	그린 뉴딜 정책으로의 전환, 그리고 50+세대 정훈	36
이슈 PICK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50+세대 이지연	40
이슈 PICK	지역에서 가능한 그린 뉴딜 일자리 이유진	44
50+정책연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50+세대를 위한 그린 뉴딜 일자리 정책 임소현	49
글로벌 50+	미국 메릴랜드 부양 지원 서비스 박민경	53
글로벌 50+	중국, 60대 이상 고령층 빈곤화 막기 위해 주력 임지연	57

Volume26**50+ 1인가구와
돌봄에 관한 고찰**

이슈 PICK	50+세대 1인가구에 대한 돌봄 필요성과 방향 송민혜	66
이슈 PICK	중장년 남성 1인가구와 상담 김현수	70
이슈 PICK	50+세대의 돌봄, 돌봄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박세경	74
이슈 PICK	커뮤니티케어와 50+세대 안기덕	78
글로벌 50+	미국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전문직 간 교육(Interprofessional Education, IPE) 박민경	81
글로벌 50+	스페인 노인을 위한 대학, 주립 노인대학 프로그램협회 아에폼(AEPUM) 장혜진	86

Volume27**포스트 코로나,
50+세대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며**

이슈 PICK	학습 관계망이 중요한 50+세대 이희수	96
이슈 PICK	서울시 50+ 1인가구와 주거 취약 문제와 대안 송인주	99
이슈 PICK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50+세대의 여가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윤소영	104
50+정책연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장년의 재취업과 경력전환 지원 홍성표	107
인포그래픽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 포스트 코로나 50+세대 라이프스타일 변화 연구 송민혜	111
글로벌 50+	미국의 노인 정책: 지역사회에서의 연속적 거주(Aging in Place) 박민경	114
글로벌 50+	'캐나다 카운슬링 교육 및 연구기관(CERIC)'의 '전문가용 경력개발 프로그램' 소개 표성일	120

Volume28**위드 코로나 시대
50+세대의 지원 방향**

이슈 PICK	뉴노멀 시대의 서울시50+정책의 미래 비전 황윤주	128
이슈 PICK	퇴직을 앞둔 재직자를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실태와 정책 제안 김대중	137
이슈 PICK	서울시 50+보람일자리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강소랑	142
이슈 PICK	서울시 중장년과 스마트복지 조규형	148
인포그래픽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 포스트 코로나 50+세대 미래 삶에 대한 전망과 인식 송민혜	152
글로벌 50+	"Das Leben Leben: Live your Life" 당신의 삶을 살라 미국의 원격의료 박민경	155

5 0 +
리포트
2021

2021년 특별호 Volume 24

특별호

중장년 정책의 필요성,
그 특별함

- 06 대전환 시기의 중장년 정책의
의의와 방향
정철영
- 09 은퇴자를 위한 정책도 대책도 없는
재앙을 막으려면
최종걸
- 12 포스트 코로나,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역할
최영준
- 16 내가 지켜본 서울시50플러스재단
5년의 변화와 당사자로서의 제안
김수동
- 21 새로운 노년문화가 필요하다
김은형
- 24 한국형 뉴딜 정책 안에서 발견하는
50+일자리의 가능성
남경아
- 28 포스트 코로나, '전환'에 직면한
50+세대의 현재, 그리고 미래
황윤주

대전환 시기의 중장년 정책의 의의와 방향



중장년기는 청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중간시기로, 태어나서 청년기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습득된 삶의 연륜과 지혜가 무르익은 시기이며, 이후 노년기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중장년기에는 가정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 불안정하고 어렵기도 하는 등 개인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 또한 일반적으로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고, 가족 중심적·독립적 자립 의식이 강하며, 사회공헌에 참여 의사는 높으나 실제 참여율은 저조한 세대이다.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유자 및 전문 사무직에 종사하는 고학력 전문집단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특성이 있어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요구되는 세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장년기 세대에 대한 지원정책은 2010년을 기점으로 변화하였다. 2010년 이전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복지 중심의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이후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으로 인해 이들의 노후 준비, 사회활동이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와 맞물려 검토되기 시작하면서 중장년 세대 일자리, 노후, 문화, 교육 등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부처별 혹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였다. 201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제1차 노후준비지원 5개년 계획’은 안정적인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2017년에는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계획’에서 본격적인 중장년의 일·활동에 대한 지원안이 모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중장년 정책의 의의와 방향의 관점에서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이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중장년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이다.

「서울시 50+세대 실태 및 수요조사 연구」(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7) 결과에 따르면 중장년의 주요 고민 및 관심사는 건강 관련 문제(34.7%)와 경제적 문제(33.6%)가 가장 높았고 노후설계 프로그램 혹은 건강·보건 관련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직장 혹은 가사 등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해서(61.1%)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하였지만 향후 동호회·동창회 모임(50.9%), 관광(50.3%) 등을 희망한다(중복 응답 결과). 이는 중장년기에 처한 상황이 개인마다 다르고, 이에 따라 요구하는 지원 사항이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보면 고용노동부/과학기술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일자리위원회에서는 일자리 지원정책을, 교육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에서는 노후 준비, 여가·교육, 사회활동 지원 정책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이들 정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장년 지원 정책은 컨트롤타워에서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되고, 이와 관련한 기관의 장단점이 분석 및 고려되어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 아래에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중앙부처별, 기관별로 독립적으로 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되다 보니 중복적이고 과도한 부분도 있고, 미흡하거나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중앙부처 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 또한 지방정부 간 그리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 역할 분담과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기관주도 방안과 대상자주도 방안이 균형 있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중장년 전후 세대와의 유기적 연계이다.

서울시는 중장년 세대를 다루는 재단명에 ‘50플러스, 50세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곳’이라는 명칭을 쓸 정도로 연령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연령대를 명확히 해야 사업대상이 명확하고 사업집행을 집중해서 할 수 있다. 비근한 예로 직업의 범위는 단기간의 직업훈련으로 양성되는 직업에서부터 의사나 변호사와 같이 장기간의 교육이 요구되는 전문직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미국의 직업교육법에서는 직업교육의 교육수준을 전문대학 이하로, 분야를 농업, 공업, 상업, 수해양 등으로 엄격히 규정하여 제한된 예산에 국한하여 쓰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중장년 세대를 50세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고 장점이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 중장년의 시작 연령은 관련 법령과 사회법규에 따라 각기 다른데 젊게는 40세 이상부터 늦게는 50세 이상이기도 하다. 또한 현실적으로 개인에 따라서는 50대보다도 더욱 중장년의 특성을 지닌 40대가 있고, 70대보다도 더욱 노년의 특성을 지닌 50대도 있으며, 49세와 50세간에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사업대상의 나이를 50플러스에 국한하지 않고 다소 유연하게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중장년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집행시, 연령보다는 중장년의 특성 여부를 더욱 고려하여 유연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중장년층이 아닌 장년층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또한 장년층 연령을 50세에서 64세로 규정할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성공적인 중장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청년기를 잘 보내야 하고, 중장년기 이후의 노년기도 계속해서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장년기를 지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중장년기만을 잘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생 전체를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기에 개인의 중장년기 전후 시기, 즉 청년기와 노년기도 함께 고려하여 정책 방안 시 전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연구수행과 정책의 집행에서도 중장년기만을 따로 떼어서 하기 보다는 청년기와 노년기의 연속선상에서 상호 연계되고 유기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중장년 지원 정책과 수립, 집행에 관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 마련과 운영이다.

중장년 지원 정책은 다각적인 관점에서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장년기는 개인에 따라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구가 잘 반영되어 효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사업별·프로그램별로 측정 문항, 측정 방법, 측정 시기 등을 포함한 평가시스템이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구축되어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모니터링과 평가 결과는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다음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별·프로그램별 시행 목적이 명확히 설정되고, 목적이 이끄는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년 지원 정책을 하다 보면 왜(why) 하는가에 관한 근본적인 고려 없이 방안을 위한 방안, 예산집행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시행 등 세부 방안(how)에만 매몰되기 쉽다. 따라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하여 왜(why) 하는지의 목적달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점검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중장년 지원 정책이 잘 수립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삶에서 중요한 중장년기를 성공적으로 보내어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윤택해지기를 기대하고, 그러한 중추적인 역할을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하리라 굳게 믿는다.

참고문헌

- 서울시50플러스재단(2017), 「서울시 50+세대 실태 및 수요조사 연구」.

은퇴자를 위한 정책도 대책도 없는 재앙을 막으려면

지난 2017년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최근 4년간 주된 일자리 퇴직 나이는 2015년 52.1세, 2016년 50.3세, 2017년 49.2세, 2018년 47.5세로 점점 짧아지는 추세지만,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장하는 나이는 71.4세라고 한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약 24년 동안 어떤 형태로든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80세와 90세에도 대통령이 되는 세상이다. 다만 그 일자리가 연속성이냐는 따져볼 사안이다.

우리는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좋아한다.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 중 하나는 5세대 이동통신(5G)을 세계 처음으로 상용화시킨 대한민국이다. 다른 하나는 65세 인구가 인구 대비 초고속으로 증가하고 있는 초고령화 국가라는 사실이다. 언뜻 다른 사안 같지만 둘 사이에는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 5G는 자율과 비대면을 더 앞당기는 소위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변한다. 굳이 육체노동을 하지 않고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런데 이 놀랄만한 5G는 65세가 되기도 전에 사람들을 현재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내몰고 있다. 정보통신(IT)이 이끄는 4차산업혁명이 준비할 겨를도 없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후 60세 정년퇴임도 전인 40대 중반에 일터에서 나와야 하는 현실이 된 것이다. 이전 일터보다 앞으로 살아야 할 세월이 더 많은, 장수 고령사회에 일원이 된 셈이다.

노령화의 그들은 질풍노도와 같이 오고 있다. 2년 전부터 우리나라 정부 예산은 500조 원을 넘어섰고 조만간 600조 원도 돌파할 전망이다. 예산의 1/5 이상이 고령화에 관련된 복지 분야에 투입되고,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주국방을 부르짖던 시절의 국방예산보다 노령화에 투입되는 복지 예산 규모가 전체 예산 중에 제일 큰 규모일 만큼 빠른 속도와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어찌보면 순환예산이 아닌 소모성 복지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재생산을 위한것이 아닌 만큼 이익을 제기할 이유는 없지만 이런 흐름이라면 조만간 닥쳐올 우리 현실에는 재앙이 될 수 있다. 그 현실은 인생 2막을 전개할 50+세대에게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도로 숙련된 지적 노동이 한순간 단절되고, 축적의 세월이 벼랑 끝에 내몰릴 위기이다. 4050세대부터 맞닥뜨려야 할 숙명치고는 가혹하다 할 수 있다. 축적되고 숙련된 노동을 전수하고 이를 더 고도화할 수 있는 정책과 대책이 없으면 새판 짜기는 쉽지 않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중년의 문턱에서, 문턱을 넘지도 못하고 젊음을 헌신했던 곳에서 떠나, 갈 곳은 '이산 저산' 밖에 없다. 전국 방방곡곡이 중년 등산객들로 넘쳐났다. 그들의 산행을 보면 젊은이들 못지않은 체력을 과시한다. 산행이 직업이고 직장인 셈이다. 소위 '나는 자연인이다'가 새로운 유형의 직종이 되었다. 우리나라 직업군이 수만 개에 이를 만큼 많지만 뚜렷한 직장장 직종이 없는 백수형 은퇴자들도 하나의 직종으로 분류해야 할 판이다.

일터가 최대의 복지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소일거리가 있어야 건강도 챙기고 삶의 질도 유지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귀농·귀산·귀어 등 소위 귀촌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빈약해서 갈수록 농어·산촌은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생면부지에서 마주하기도 버거운 데 소일거리마저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온다. 준비 없는 은퇴 때문이다. 개인적 이유라고 돌릴 사안이 아니다. 저출산 초고령화는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고령화에 맞는 산업과 일터를 정책과 대책으로 세우는 일이다. 그 정책과 대책 속에 은퇴자들이 되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 50세 이상 인구를 위한 기술과 디자인을 연구하는 미국 MIT 대학교 에이저랩 책임자이자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의 저자 조지프 F 코글린은 노령화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정작 그들을 위한 시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구매력이 4050 이전 세대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50+세대를 위한 시장이 없다고 압축적으로 고령화 대책을 지적했다.

2021 <50+리포트> 특별호 주제인 “서울시 중장년 정책의 필요성, 그 특별함”도 이와 별개가 아니다. 직업학을 대학에서 새로운 학과로 개척한 김병숙 박사는 최근 「사십과 오십 사이」라는 신작을 내놨다. 40여 년간 직업에 관한 연구로, 4050세대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과 현재의 변화에 맞춰 미래를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해 100세 인생에 대비하라는 내용이다.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났다 해도 4050 이후 삶도 주된 일자리와 연속성을 갖게 인생 재판 짜기를 하라는 조언인데, 그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프로그램일 수 있다. 4050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은퇴 후가 아닌 은퇴 전 프로그램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아온 수많은 의무교육처럼 법과 제도 속에 일 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할 최소한의 인생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받도록 해야 한다. 종전 일터의 연장선이든 인생2막의 새로운 길이든 사다리 역할과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무교육이 비단 청소년 대까지만 머물게 하지 않아야 할 이유이다. 고령화를 지연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직종만큼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그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징검다리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은퇴 후 70세까지 일한다는 OECD 조사에서 봤듯이 고령화 시대에는 이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를 시간으로 따지면 은퇴 후 8만 시간, 40년에 해당하는 인생 후반부의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50플러스재단은 탈바꿈해야 한다. 수많은 교육기관과 장소들이 있지만, 은퇴자들이 쉽게 접근하기에는 물리적 재정적 부담이 크므로, 그 역할을 50플러스재단이 담당할 수 있도록 최적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국내 인구의 41%가 노인층이라고 한다. 또 현재 노동력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2020년 50세 이상 노동력 비중이 약 25%에서 2050년 그 비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때문에 현재 노동시장에서 은퇴 단계에 서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1955~1963년에 태어난 세대) 사실 ‘퇴장’이 아니라 ‘재진입’을 해야 한다. 비단 노동뿐만 아니라 노령화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산업과 문화 그리고 여가를 찾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직업의 연속과 새로운 세계를 설계할 선택적 프로그램이 맞춤형으로 짜일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산학연은 꼭 산업계 학교 연구소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학교와 연구소 역할을 통해 산업계와 협업하여 길잡이 역할을 하는 심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인생2막 중년의 꿈을

설계하는 ‘산교육의 현장’ 역할이어야 한다. 문턱 없이 누구라도 즐기면서 배우고,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접근성이 원할 수 있게 구청 단위별 공간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25개 구청에 4050세대를 위한 인생 2모작 재할 교육 공간을 단계적으로 또는 여건이 갖춰진 곳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산업계가 협업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

공공조직의 경우 은퇴 전 1년간 퇴직을 위한 시간을 주지만 일반 사기업의 경우 퇴직 직전까지 그럴 기회가 없다. 은퇴자에게도 양극화가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서울 소재 기업들로부터 은퇴를 준비하는 의무 위탁 교육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법제화를 통해 은퇴자에게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부와 기업의 부담을 동시에 덜 수 있는 완충지대 재할 교육기관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확장성을 넓힐 필요가 있다. 재단의 설립 취지도 살리면서 외연 확장을 통해 퇴직과 은퇴가 아닌 재할로 다시 각자가 꿈꾸는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성공 사례가 전국으로 확대될 때 고령화의 시간적 속도도 그만큼 늦춰질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병숙(2020), 『사십과 오십 사이』, 성안당.
- 조지프 F. 코클린(2019),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 고령화의 공포를 이겨 낼 희망의 경제학』 (원제 The Longevity Economy), 부키.

포스트 코로나,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역할

코로나19로 익숙한 일상이 멈췄다. 함께 모여 만나고 일했던 50+세대에 익숙한 컨택트 사회는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언택트 세상으로 급변했다. 화상 면접, 온라인 강좌, 원격진료, 비대면 예배 등이 일상화되고, 머지않아 택시가 공중에 날아다닐 미래의 디지털 세상이 50+세대에게는, 필자와 같이 60줄에 들어선 베이비부머 1세대들에게는 적잖이 불편하고 두렵다. 초유의 비대면 사회에서 아날로그적 50+세대를 대상으로 비전과 운영체계를 설계했던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어떤 기능과 역할로 재설계해야 할지 고민과 성찰의 지점에 있다.

박정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장은 방송통신인 온라인 새해 인사회에서 올해를 '포스트 팬더믹 사회' 원년으로 기존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변화하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로 전망했다. 닉 보스트롬 옥스퍼드대 인류미래연구소 소장은 "오래된 규칙이 산산이 조각나고, 한 달 전 비현실적으로 보였던 일들이 갑작스레 이뤄지고 있다"고 하였고, 제러미 리프킨은 "세계는 무너졌고 우리가 알던 방식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예측했다. 비대면이 일상이 됐고 디지털 기술이 50+세대의 남은 3~40여년 동안이 삶의 도구가 될 것이다. 디지털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50+세대가 축적한 아날로그 시대의 경험과 지식, 지혜는 활용 가치가 급락하고 무용해질 수 있다.

50+세대의 남은 삶의 도구가 된 디지털 역량은 어떤 수준일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55~65세의 디지털 역량 부족 비율은 27.8%로 OECD 평균치인 17.1%보다도 높고, 8.5%인 일본과 4.3%인 노르웨이와 견줘봐도 현격하게 높은 비율이다(OECD Skills Outlook '19.5.). 한가지 희망적인 것은, 50+세대는 고학력에 아날로그와 디지털 전환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에 대한 거부감이 덜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적절한 교육과 개입을 하면 빠르게 적응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높은 스마트폰 보유율에 비해 필수매체로 인지하는 비율은 22.8%로 매우 낮아, 젊은 층뿐 아니라 50+세대 내에서도 디지털 활용 격차 발생 우려가 높다.

퇴직한 서울 50+세대의 10명 중 9명은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생계형 24.69%, 창작추구형 64.27%). 재취업보다 사회공헌을 하고픈 활동추구형은 11.04%뿐이다(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9). 활동추구형 응답율은 2017년 사회활동참여율(13.4%)과 비슷하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50+세대가 기존 노년 세대와 달리 높은 교육 수준과 능력, 경제력을 갖추었고, 축적한 경험과 지혜를 사회 공헌 활동에 쏟을 의지도 높지만, 대다수에게는 일자리가 더 절절한 바람이다. 지난해 코로나로 대면 프로그램이 불가능한 탓에 캠퍼스 방문 인원이 13만 3천여 명으로 전년(2019년) 대비 1/3토막이 났다. 반면, 일자리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2배가량 늘었다. 이들은 필요한 실무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은 후에 현장에 배치되었다. 온라인

강좌 수강 능력이 곧 일자리 취득의 필요조건이 되고 있다. 디지털역량 요구는 점점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다. 재단도 새해 들어 그린뉴딜 인턴을 공모하는데, 컴퓨터 활용 능력이 선발 우대조건이고 50+열린학교 강사 모집에서도 비대면/디지털역량이 자격조건에 들어있다. 일자리도 디지털 미숙자들을 소외시킨다. 이제 디지털 역량은 일자리와 생존을 위한 필수 도구가 되어버렸다.



서울시 50+세대는 224만 명으로 서울시 인구의 23%나 되는 큰 인구집단이다. 10명 중 4명가량은 대졸 이상 고학력자이다. 기술과 경험, 능력과 경제력까지 일궈낸 산업화 주도세력으로 77%가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이 크다. 또 경험과 열정은 이타적 사회공헌 활동에 재할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다. 하지만 사회 안전망이 부족하고, 자녀 양육과 부모 봉양에 따른 지출이 커서 대부분 노후 대비 없이 은퇴하거나 퇴직했다. 살아온 만큼 더 살아야 할 100세 시대가 되레 불안하고(4명 중 3명 노후자금 걱정), 더 일하고 싶어한다(은퇴자 53%).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서 있어 지원대상이면서도 사회 기여가 가능한 양면적 특성을 지닌 독특한 세대다.

일과 사회공헌 욕구 충족, 여기에 필수적으로 무장해야 할 디지털 활용 역량이 50+세대의 공통된 관심사임이 자명해졌다. 이를 구현하려면 50+세대가 갖춘 아날로그적 잠재력을 디지털과 접목해야만 활용 가치를 증진할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새 동력을 추동할 역할과 기능 확대는 재단이 선제적으로 취할 막중한 책무다.

올해 재단은 설립 5년째를 맞는다. 지난 4년여 서울 50+세대의 생애전환과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혁신 플랫폼으로서 노력해온 성과가 적지 않다. 4년 누적 캠퍼스 이용자 100만여 명(서울 50+ 인구의 45%), 매년 500여 개 교육프로그램 운영, 300개 이상의 커뮤니티와 사회공헌단 지원, 일자리 발굴 사업 등을 진행해왔다. 벤치마킹하러 온 국내외 기관 단체가 뉴욕 블룸버그재단 등 34곳이며, OECD 선정 공공부문 혁신우수사례(‘17),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소 선정 사회혁신사례(‘20)로 호평 받았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필자는 어떻게 단기간에 탄탄한 기반과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서울시의 50+세대 정책과 재단의 역량이 참 부럽다. 이런 성과와 역량을 갖춘 재단은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키워드에 맞춰 50+세대가 ‘건전한 디지털시민’으로 자리 잡도록 적응을 돕고, 일과 사회공헌에 대한 욕구를 충족 시켜 나가야 한다. 앞서 언급한 재단의 역할과 기능 확대에 대한 고민을 풀어보자.

1. 보편적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기기 이용능력) 교육 허브로서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기능을 강화하자.

새해 들어 모든 공모와 참여가 온라인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접수에서 면접, 수료조건인 화상교육, 각 캠퍼스 교육과정 설명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바꿔 말하면, 디지털 미숙자에게는 언감생심 참여할 기회조차 없다. 이른바 50+세대 내에서도 정보격차가 조장될 수 있는 지점이다. 왜냐하면 50+세대 내 연령 분포가 베이비붐 1세대 중심에서 386세대의 진입으로 매년 변하고 있어서 연령에 따라서 또 그간의 직업과 경력에 따라서 정보 역량이 크게 차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50+세대 내 정보격차 해소 기능뿐 아니라 삶의 보편적 매뉴얼로 작동해야 한다. 국민 인식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정보격차는 더 커질 것이며(83%) 정보격차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어(51%), 정보격차 해결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75%)(한국 리서치 주간리포트, 2020). 때맞춰 2020년 5월,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를 뒷받침할 법적 장치는 마련됐다.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는 50+세대는 속도와 유연성은 부족하나 많은 경험과 자본 네트워크가 강점이어서 디지털 기술과 결합했을 때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을 창출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국내 첫 50+세대 문제 해결과 정책개발 전문기관을 표방한 재단에서 보편적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교육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분명한 이유이다.

2.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육성한 디지털 역량 강화자를 정보격차 해소 멘토로 활용하자.

디지털 능력을 갖춘 50+세대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수료한 선험자를 동년배나 고령층 디지털 격차 해소를 돕는 ‘디지털 흥익인간’으로 활용한다면, 디지털 미숙자 감소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게다가 그들에게 소정의 강사료라도 지급하면, 일자리 창출의 부가적 성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3. 권역별 캠퍼스를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하고 자치구 50플러스센터와 협력을 강화하자.

현재 4개 50플러스캠퍼스의 콘텐츠와 프로그램들은 유사 중복이 많다. 앞에서 인용한 50+세대 실태조사를 보면, 생계형 진로준비 응답자는 남부지역 거주자, 사회공헌활동 추구형은 북부와 중부 거주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민의 욕구와 산업구조를 반영해 구로디지털단지와 가까운 남부 캠퍼스는 일자리 중심으로, 중부는 사회공헌 중심 등으로 특화하면 차별화되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자치구 50플러스센터와 협력을 강화해 프로그램을 소지역적 특성을 담은 강좌 중심으로 또 관내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교육의 장으로 차별화하여 더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



4. 서울시50플러스재단 참여 활동가를 대중적 스타로 만들기 위한 홍보 역량을 강화하자.

요즘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지상파와 종편에서 50+세대 대상 프로그램 제작이 늘고 있다. 인생 2막의 소소한 일상과 도전 얘기가 정겨워서 필자도 즐겨본다. 보면서 재단을 거쳐 새로운 일을 찾은 활동가, 재취업자 및 창업가, 유튜버스쿨 대상자가 왜 저 자리에 없을까 참 아쉬웠다. 디지털미디어이건 지상파 방송이건 성공사례는 널리 알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만큼 홍보 효과가 크고, 이를 통해 재단의 존재를 몰랐거나 방문을 미적거려왔던 50+세대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방송 출연은 방송사가 스스로 알아서 해주지 않는다. 귀찮을 만큼 제작진을 만나고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 스타 창출의 엔터테이너사급의 열정적인 홍보 전략과 행동이 절실하다.

불분불계 불비불발(不憤不啓 不排不發). 계발의 어원이 되는 공자 말씀이다. 알려고 애태우지 않으면 이 끌어주지 않고 애써 표현하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동안 50플러스캠퍼스 참여자 대부분은 공자 말씀처럼 스스로 배우려고 문을 두드렸을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에 미숙하고 경제력이 약한 50+세대는 나서서 알려고 하기보다 가르쳐주기를 기다리지 않을까? 포스트 팬더믹 원년에 재단이 나서서 더 열심히 알려주고 가르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워주자.

참고문헌

- 김혜민(2018),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지만 눈 떠보니 50」, 한국경제신문.
- 리처드 톱스 외(2016), 「미래의 속도」, 청림출판.
- 송호근(2013), 「그들은 소리 내 울지 않는다」, 이와우.
- 서울시50플러스재단(2020), 「50+리포트」.
- 서울시50플러스재단(2020),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 심층 분석 보고서」.
- 서울시50플러스재단(2019),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직업이력 및 경제활동」.
- 안희경(2020), 「오늘부터의 세계」, 메디치미디어.
- 제이슨 생커(2020), 「코로나 이후의 세계」, 미디어숲.

내가 지켜본 서울시50플러스재단 5년의 변화와 당사자로서의 제안

삶의 전환점에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만나다

“대표님,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생긴데요. 아세요?”
“50플러스? 그게 뭐죠?”

2015년 말쯤으로 기억한다.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¹ 기간은 끝나가고 어렵게 ‘더함플러스협동조합’² 법인 설립은 하였지만, 계획했던 어르신들을 위한 공유주거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었다.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에 참여하여 청년들 틈에서 공공의 재정을 축내가며 지원을 받았는데, 먹튀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도 살짝 되던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을 이야기하였다. 마침 내가 고민하는 노후 주거 문제가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머지않아 나를 포함한 우리 세대가 더 혹독하게 겪어야 할 문제이기에 대상을 노인 세대에서 중장년 세대로 옮기고 새로운 솔루션을 구성하는 시기에 재단을 알게 된 것이다.

50+세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2016년 서부캠퍼스가 열리면서 가장 처음 나온 보람일자리 사업인 모데레이터(지금의 ‘학습지원단’)³ 모집에 참여하였다. 그렇게 나의 50플러스 활동가 생활은 시작되었다. 모데레이터로 ‘커뮤니티+’ 사업 운영을 담당하며, 우리 세대의 다양한 욕구와 활동을 보았다. 당사자 연구 공모에 선정되어 공동체 주거에 대하여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만들고 동시에 사업적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체주거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였다. 공동체주거 교육은 이후 서부캠퍼스 정규과정으로 채택되어 매 학기 학습자들과 만날 수 있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지금 우리 더함플러스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 주거전환 운동의 동지로 활동하고 있다.

“50플러스캠퍼스는 단순한 평생학습 교육장이 아니다.”

나는 마흔에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10년 넘게 CEO로 일을 했다. 오랜 벤처 생활로 피로감은 쌓이고 “과연 나 잘 살고 있나?” 하는 회의가 점점 커져만 갔다. 긴 고민 끝에 2014년 주택소비자운동과 사회적기업의 뜻을 품고 홀로 삶의 전환점에 섰다. 과거 사업적 이해관계 또는 혈연, 지연, 학연으로 지탱해 왔던 관계의 단절은 충분히 예상했다. 그러나 정작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장소의 상실이었다. 집과 직장만을 오갔던 내게 허용된 공간은 사람들 눈치를 보아야 하는 공공도서관 또는 카페와 같은 소비공간뿐이었다. 마음 편히 새로

1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팀을 선발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웹사이트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care/startupEnteUpbring.do?m_cd=F012

2 50+ 세대에게 ‘소그룹 공동체에 의한 협력적 주거’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협동조합.
[출처] 협동조합 Blog, [협동조합 여기!] #12. 공유주택에서 행복 찾는 ‘더함플러스협동조합’ 중에서 https://blog.naver.com/coop_2012/221671219034

3 50+세대(만 50~64세)의 자기주도형-맞춤형 학습 설계를 지원하고 학습상담·교육운영지원·모니터링 업무 등을 수행하며, 교육을 통한 제2의 커리어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
[출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웹사이트 <https://50plus.or.kr/detail.do?id=3240658>

운 일을 도모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허용된 공간은 사람들 눈치를 보아야 하는 공공도서관 또는 카페와 같은 소비공간뿐이었다. 마음 편히 새로운 일을 도모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제3의 장소> 저자 레이 올든버그는 “우리에게는 삶을 떠받칠 제3의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과거 익숙했던 관계와 공간을 상실하고 헤매던 나에게 제3의 관계를 이어주고 새로운 삶을 떠받쳐준 제3의 공간이 되어준 곳, 그곳이 바로 공유사무실 ‘스페이스 힘나’이다. 2017년 서부캠퍼스 공유사무실에 입주하면서 나의 활동은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다양한 활동으로 본격적인 ‘작당의 시대’를 열어간 것이다.

50플러스캠퍼스에서 나는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자유로움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었다. 수시로 벌어지는 작당은 즐거웠으며, 마음만 맞으면 못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었다.

재단과 함께 한 앙코르커리어 운동

“한국 사회의 50+세대는 고립되어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가 커뮤니티를 형성해 스스로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적인 활동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50+세대가 단순히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인 수입과 개인적인 가치 추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앙코르커리어 운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남경아, 2017).

나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나와 우리 더함플러스협동조합은 재단이 지향하는 앙코르커리어 운동⁴의 당사자이다. 앙코르커리어 운동의 핵심은 50플러스 당사자들이 정책의 소비적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각자가 추구하는 다양한 사회 가치를 실현하는 공동생산(코프로덕션, co production)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재단은 베이비붐 세대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기회’와 ‘대안’으로 생각하였다. 특정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부정적 인식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은 ‘베이비부머’라는 말 대신 ‘50플러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과거 ‘인생이모작’의 개념은 전통적 가치관에서의 인생 재설계 및 성공적 노후 준비 차원의 접근이었다. 하지만 ‘50플러스’는 사회의 짐이 되는 노년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힘이 되는 성숙한 선배 시민, 후기 청년으로서 새로운 생애주기를 정의하고 있다. 이전에 없던 ‘50플러스’라는 새로운 세대 상을 정의하고 사회적 공감을 확산시키며 당사자 운동의 장을 열어 주는 것, 바로 여기에 재단만의 특별함과 혁신성이 있다.

설립 이후 어느덧 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50플러스’는 이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의 익숙한 일 반명사가 되었다. 50플러스 앙코르커리어 운동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하였다. 2021년 1월 현재 서울에는 4곳의 권역별 캠퍼스, 9곳의 자치구 센터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이제 서울 어디를 가도 쉽게 50플러스캠퍼스와 센터를 만날 수 있다.

재단에 바란다

이렇게 50플러스 당사자들의 열렬한 호응과 재단 임직원들의 열정과 헌신의 힘으로 빠르게 성장해 온 50플러스 앙코르커리어 운동은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멈춰 서고 말았다. 하지만 언제까지 코로나를 탓하며 멈춰 서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여야 한

4 ‘앙코르커리어(Encore Career)’는 인생후반 지속적 수입(Paycheck)뿐만 아니라 개인적 의미와 성취(Passion), 사회적 영향과 가치(Purpose) 등 이 세 가지 모두를 만족하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출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웹사이트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928871>

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이미 모든 것은 변하였다. 지난 시간 50플러스 당사자 입장에서 재단과 함께 많은 일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의 양코르커리어 운동에 대해 몇 가지 재단에 부탁을 하고 싶다.

1. 양코르커리어 운동의 주체는 재단이 아니라 50플러스 당사자라는 것을 잊지 말자.

모든 조직은 시간이 지나고 조직이 커짐에 따라 초기의 역동성은 약화되고 관료화되기 쉽다. 지금의 한국 시민사회는 가히 중간지원조직 전성시대라 할 만하다. 물론 필요한 역할이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하지만 일부에서 지원기관이 조직도 커지고 사업성과를 자랑할수록 당사자 운동의 역량은 약화되는 역효과를 초래했던 것도 부정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재단도 언제든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2. 50+세대에게 적합한 일활동 모델을 만들자.

50+세대에게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일자리다. 하지만 어렵다고 이 문제를 피해서는 운동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점점 줄어드는 전통적 일자리만을 찾거나 예산 소진형 단기 일자리를 반복하는 것도 답은 아니다. 우리가 혁신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것은 다양한 일과 활동의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50플러스가 잘할 수 있는 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 지속가능한 일을 찾고 만들어야 한다. 나는 그 유망한 분야 중 하나가 ‘사회서비스’ 분야라고 생각한다. 사회서비스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공공행정,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환경, 주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50플러스를 위한 혁신형 사회서비스’라 함은 기존의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구별되는 것으로, 주거, 환경, 교육, 보육, 돌봄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50플러스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혁신적이며 지속가능한 사업 및 일활동 모델을 의미한다. 이 일의 특징은 첨단기술 보다 적정기술을 필요로 하며, 자본 중심이 아닌 사람(관계) 중심의 일로 경제적 성과보다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50플러스를 위한 혁신형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기존의 일자리 모델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기획, 실험, 확산, 운영 등 사업의 전 단계에 50플러스가 주도적으로 참여
-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를 발굴하거나 기존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
- 기존의 고용시장 일자리와 경쟁하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
- 다양한 민간 및 공공분야 파트너와의 협치를 통해 만들어지는 민관협력형 일자리

이러한 분야에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50+세대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재단이 안전한 시험대를 제공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2019년 서울시50+보람일자리 ‘학교안전교육단’ 활동 모습



2019년 서울시50+보람일자리 ‘행복도시락나눔지원단’ 활동 모습

3. 50플러스 캠퍼스(센터), 로컬뉴딜의 거점이 되자.

나의 경험에서 이야기했듯이 50플러스 삶의 전환에 있어 50플러스캠퍼스(센터)가 제공하는 공간의 의미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제 이 공간들은 서울시 전역에 존재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각각의 공간은 위치한 지역만 다를 뿐 차이를 알 수 없다. 공간을 이용하는 모습 또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로 보이며, 50플러스 당사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여러 공간의 서비스를 소비하는 모습이다.

코로나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다. 그중 가장 핵심은 ‘로컬’이다. 코로나로 인해 장거리 이동에서 근거리 이동, 다중의 집합이 아닌 분산된 소규모, 익명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신뢰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로 일상이 전환되는 로컬택트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기초 자치구 단위의 근린생활권 사회관계망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로컬뉴딜의 개념이며, 50플러스캠퍼스(센터) 공간이 바로 로컬뉴딜의 거점 공간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위치한 공간들을 단순한 공적공간을 넘어 사회적 소유로 인식하고 공유하는 다양한 50플러스 당사자 개인 및 단체들이 등장하여야 할 것이다.



2019년 서울시50+보람일자리 '마을기록지원단' 활동 모습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우리는 선수다

“50+세대에게는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고,
새로운 일과 삶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은 필요하다. 치열하게 경쟁했던 50 이전 각자 도생의 삶에서 돌아설 전환의 시간이 필요하다. 50플러스캠퍼스는 인생의 하프타임을 맞이한 50+세대 일과 삶의 전환을 위한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50+세대는 나름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캠퍼스를 찾아온다. 캠퍼스의 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은 문제 및 상황을 인식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의지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일과 활동을 경험하고

실험할 수 있는 안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떠나야 한다. 캠퍼스를 떠나 우리 50+세대를 기다리는 지역으로, 현장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조직도 사람도 막히거나 정체되지 않고 건강하게 순환할 때, 재단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심장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50플러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우리는 선수다.
돌아오는 봄, 새로운 전성기를 준비하는 50플러스의
열기로 가득한 캠퍼스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남경아(2017), 「50플러스세대」, 서울연구원.
- 레이 올든버그(2019), 「제3의 장소 : 작은 카페, 서점, 동네 술집까지 삶을 떠받치는 어울림의 장소를 복원하기 (원제 The Great Good Place)」, 풀빛.

새로운 노년문화가 필요하다



최근 막 삼십대에 진입한 젊은 예술가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는 성인이 되고부터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많은 일을 했는가 설명하면서 “줄라리 열심히 했다”라고 말했다. ‘줄라리’라는 가벼운 욕이 나름 진지한 인터뷰에서 툭 튀어나왔을 때 우스우면서도 묘한 기분이 들었다. 지나가 버린 젊은 시절이 갑자기 눈앞을 쓱 지나가는 느낌이랄까.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상황에서 저런 욕을 하면 눈앞의 젊은 예술가가 했듯이 경쾌한 휘파람 소리처럼 휘발되지 않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이를 느끼는 방식도 가지가지라는 생각과 함께 어쩐지 약간 서글퍼졌다.



중년 부부의 나이 들에 대한 성찰을 담은 영화 <위아 영, While We're Young, 2014>

별것도 아닌 욕에서 세대 차이를 느끼는 장면이 영화 <위아 영, While We're Young>에도 등장한다.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조쉬(벤 스틸러)와 코넬리아(나오미 왓츠)는 전형적인 뉴욕의 중산층 지식인 중년 부부다. 부부는 우연히 조쉬의 강의를 들으러 온 20대 부부 제이미(아담 드라이버), 다비(아만다 사이프리트)와 친해진다. 자신의 작품에 대한 존경의 표시에 마음이 녹은 조쉬는 제이미의 다큐멘터리 작업을 도와주려고 애쓰면서 동시에 ‘힙스터(hipster)¹’로 살아가는 젊은 부부의 라이프스타일에 매료된다.

영화는 40대 커플과 20대 커플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면서 40대 커플이 20대 커플을 따라가려다 ‘가랑이가 찢어지는’ 오픈 장면들을 자주 등장시킨다. 이를테면 중년 부부는 휴대폰과 노트북컴퓨터로 음악을 듣고 작업을 하는데 20대 부부는 엘피로 음악을 듣고 비디오테이프로 영화를 본다. 자전거를 타고 도심을 누

1 1940년대 미국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서, 유행 같은 대중의 큰 흐름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만의 고유한 패션과 음악 문화를 좇는 부류를 이르는 말. [출처] 네이버 어학사전.

비는 제이미를 따라 하다 조쉬는 허리를 빼끗하기도 하고 힙스터들의 밀교 같은 명상 파티에 따라갔다가 낭패를 보기도 한다. 이들은 20대 부부가 서로를 향해 장난처럼 로맨틱하게 ‘f**k you’라는 말을 하는 걸 듣고 흥내 났다가 대판 싸움을 하게 된다. “우리가 ‘f**k you’라고 하면 진짜 ‘f**k you’로 들린다구!” 같은 욕에도 연식이 있어서 젊은 사람이 하면 농담 같고 장난 같지만 나이 든 사람이 하면 진짜 폭력이 되고, 비천한 말이 된다는 거다.

영화를 보면서 내내 마음이 짠했다. 조쉬와 코넬리아의 마음이 나의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조쉬 부부가 제이미 부부의 분방한 삶의 방식이나 취향에 매혹됐던 건 신기하고 근사해 보여서가 아니다. 억눌러왔던 자신의 욕망을 그들이 봉인 해제하듯 펼쳐놓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매혹된 레트로 문화는 바로 내 청춘의 추억이었고, 잘 꾸며진 리조트 바비큐장이 아니라 허름한 길모퉁이에서 병맥주를 마시며 흥청망청 즐기는 바비큐가 원래 내 취향이였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나니 왜 ‘꺾다 놓은 보릿자루’가 되는가 말이다.

‘청년문화’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노년문화’도 당연한 건데 어쩐지 노년문화라는 말은 흔쾌하지 않다. 여든 살 정도가 되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가오는 노년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전혀 반갑지 않다. 우선은 ‘청년’과 ‘노년’이라는 단어의 호감도에서 청년이 압도적으로 지지표를 받는 냉정한, 어찌보면 편견에 가득 찬 현실이 그 이유일 것이다. 두 번째는 나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한 번도 제대로 구현된 ‘노년문화’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미디어에서 주로 보이는 중장년 문화나 노년 문화는 대체로 호감도와는 거리가 멀다. 청년문화는 현실보다 화사하거나 멋있게 포장되는 게 당연한데 중장년 문화나 노년문화는 오히려 반대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영화 <차인표>는 한때 청춘스타였다가 별 볼 일 없는 중년 배우로 쪼그라든 차인표를 차인표가 연기하는 자기반영적인 영화다. 이렇게 흥미로운 설정을 지니고 있지만, 영화 초반 등장하는 등산객 중년 여성을 그리는 건 낡은 전형에 묶여 있다. 꽃분홍색 점퍼를 때로 입고 산길을 뿔뿔히 휘둘러가며 아는 연예인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달려드는 주책 아줌마들로 그려진다.



노년의 변화를 사실적이면서 따뜻하게 그린 드라마 <눈이 부시게>

노년문화는 어떤가. 늙음에 대한 성찰을 뛰어넘어 그린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도 등장한 것처럼 노년들의 무대는 주로 다단계 판매 설명회 아니면 노인정이다. 노인정에서 그 앞 놀이터가 떠나가라 ‘내 나이가 어때서’를 합창하는 노인들이나 다단계 판매 설명회에서 동네 가수의 노래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는 할머니의 모습이 반복돼 비춰진다. 이런 걸 보면서 나의 노년을 결심한다. 노인정과 다단계 판매 설명회만은 절대 가지 않겠다고.

사실 노인정은 죄가 없다. 팔손 넘은 우리 엄마에게 자식들보다 반가운 건 노인정 친구들이고, 우리 큰 언니 시어머니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건 다단계 판매 설명회다. 나와 내 친구들은 2년 전부터 ‘지루한 중장년의 전유물’인 것만 같았던 등산을 다닌다. 클럽에서 놀기에는 체력이 받쳐주지도 않지만, 산이 가진 청량한 기운의 매력을 중년이 돼서 알게 됐다.

특히 우스꽝스럽지도 한심하지도 않은 중·노년의 문화가 거부감을 주는 건 미디어가 그것을 희화화해 묘사하는 문제도 있지만 다른 방식의 노년문화를 좀처럼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몇 달 전 <69세>라는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다. 노년의 성폭행 피해자를 다루는 무거운 주제의 영화였는데 코로나 시국인 만큼 극장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노인 관객을 여럿 볼 수 있었다. 광화문에 있는 예술영화 전용 극장인 ‘씨네큐브’는 중장년 관객들이 많기로 유명한 극장이다. 요즘 트로트가 노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것처럼 예술영화 역시 젊은 관객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예술영화 감상’은 우월하고 ‘노인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아니라 노인들이 향유하는 문화의 갈래 역시 청년문화만큼이나 다양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다양해져야 한다는 말이다.

사실 제일 바라는 건 20대 힙스터들의 파티에 낀 조쉬가 ‘꺾다 놓은 보릿자루’가 되지 말고 거기서 녹아들어 어울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아무래도 중년이 된 나만의 바람이겠지. 나 역시 20대 때 나이 많은 어른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영혼을 가출 보내고 싶은 심정이었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비판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적어도 지금의 40~50대가 본격적인 중장년기와 노년기로 달려가는 시기에는 노년문화라는 게 지금보다는 덜 낯작한 모습으로 변모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전 세대보다 풍요롭게 자란 이른바 ‘X세대’ 또는 ‘서태지 세대’는 문화적으로도 이전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걸 경험하면서 나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금의 십 대와 이십 대 문화를 강타한 ‘탐골가요’가 90년대 음악들이라는 건 상징적이다.

중장년이나 노년을 위한 별도의 문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런 건 오히려 나이 들어가는 걸 옹색하고 두렵게 만드는 장벽처럼 느껴진다. 20~30대에 경험하고 쌓아온 나의 취향을 중장년과 노년에도 장애물 없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들이 펼쳐졌으면 한다. 무엇을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것을 계속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노년의 진입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한국형 뉴딜 정책 안에서 발견하는 50+일자리의 가능성

대전환의 시대,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어떤 영역에 주목해야 할까? 새로운 일 모델 개발 중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린·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기술혁신’을 외칠수록 일자리는 줄어들었다. 기술혁신 산업 대다수가 노동절약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난이 일상화되고 기후 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정반대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원절약·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재편되어야 탄소배출도 줄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현재 한국형 뉴딜 정책의 담론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한국형 뉴딜 성과는 주민이 삶의 중심이 되는 ‘로컬뉴딜’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지난 4년 동안 로컬, 즉 마을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와 일거리에 주목해 왔고, 앞으로 규모와 내용을 더욱 확대할 전략을 세우고 있다. 마을에서 어떤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근린공원과 마을정원/공공의료와 마을돌봄망/그린 리모델링/폐기물과 자원순환/로컬 모빌리티/로컬푸드 플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분야는 50+세대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로컬뉴딜 일자리 창출의 유형과 예시

로컬뉴딜 정책	마을일자리 예시
근린공원과 마을정원	- 근린공원과 마을정원의 관리자 - 생태 및 체육 프로그램 진행자 및 마을강사
공공의료와 마을돌봄망	- 생활지원 및 건강지원 서비스 제공 - 케어 플래너 및 케어 매니저
그린 리모델링	- 에너지 진단사 - 주거관리 및 집수리 시공
마을학교	- 놀이 이모와 삼촌 - 방과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 프로그램 운영자 및 강사
폐기물과 자원순환	- 분리수거 관리자 - 분리배출 교육자 및 Re & Up 기획디자인 및 강사
로컬 모빌리티	- 따릉이 자전거 보수관리 및 협동조합 운영자 - 자전거 강사 및 프로그램 운영자
로컬푸드 플랜	- 식자재 처리시설 운영자, 건강식문화 강사 - 도농교류 및 유통관리
가상발전소	- 에너지 데이터 관리 -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태양광, 풍력 등) 설치, 관리 서비스
지역화폐	- 지역화폐 기획과 촉진 활동 -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 기획

출처: 「포스트 코로나와 로컬뉴딜」, 유창복·이재경·김다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로컬 모빌리티>¹분야만 하더라도, 코로나19 발생 후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유자전거 사업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누적회원수 17만 명, 대여건수 3천만여 건으로 향후 더욱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려면 자전거 수리공도 더 많아져야 하고, 공공거차대 설치 및 운영, 자전거학교, 자전거강사 등 새로운 분야의 일거리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2020년 7월 건물, 수송, 도시숲,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의 5대 분야에 대한 ‘서울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까지 2만 6천개의 일자리 창출과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도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되는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에는 공공일자리 창출과 그린산업 기반 조성이 있다. 그린뉴딜 정책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핵심 그린산업과 지원 산업 영역을 모두 포괄하여 괜찮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정책 실현과정에 서울시 최대 인구집단인 50+세대 인적자원의 활용과 참여가 정책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재단에서는 그린 리모델링과 에너지 전환, 도시재생과 도시환경 분야에 주목하고 있으며, 대기업이나 거대 산업 중심의 일자리에서 나아가 50+세대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지역·마을 단위의 그린뉴딜 일자리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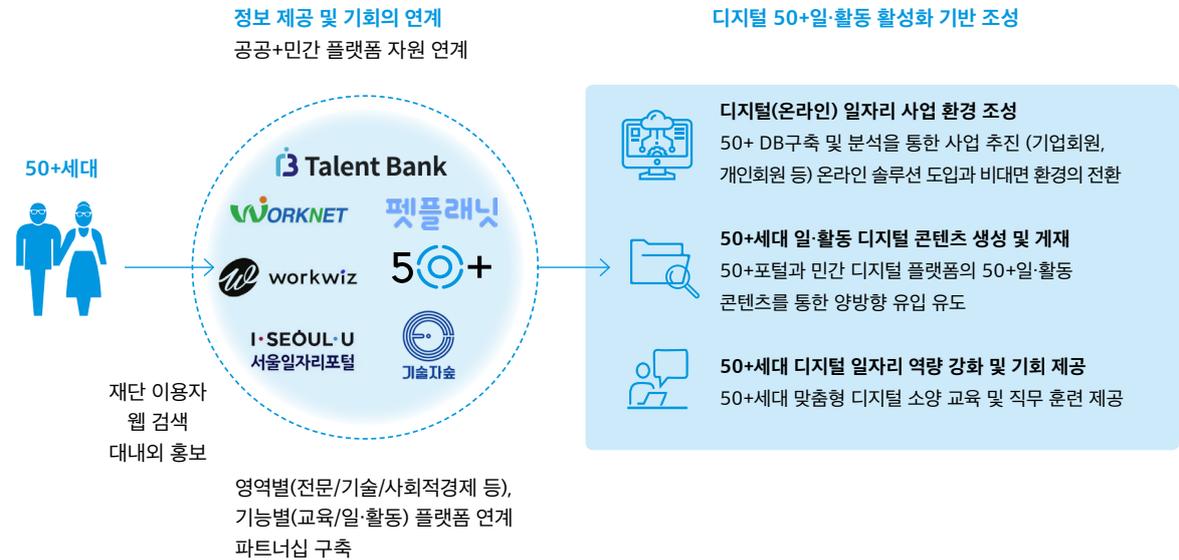
이런 배경 하에 2021년 신규 사업으로 <50+그린뉴딜 전문 인력> 사업을 추진, 현재 특화직무로 ‘그린홈리모델링 컨설턴트’ 사업 참여자를 선발 중에 있다. 그린홈리모델링 컨설턴트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핵심 그린산업의 하나인 그린 리모델링 분야에서 발굴한 50+세대 적합일자리 사업이다. 20년 이상 된 오래된 주택을 친환경적으로 수리하여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서울가꿈주택사업’의 추진과정에 50+세대가 지역 기반 활동가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양성하는 사업이다. 최종 선발된 분들은 서울시의 구와 동을 기반으로 한 7개소의 집수리지원센터,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서 친환경적 홈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서울시민들을 위한 상담과 홍보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특화직무 이외에도 도시 지역 환경개선 활동, 에너지 전환과 효율화를 위한 프로젝트, 그린뉴딜 비즈니스 지원 사업 등에 50+세대가 참여하여 조사와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모집·양성할 예정이다. 이런 경험을 밑바탕으로 50+세대가 도시재생과 환경 분야 활동가 등으로 비전을 세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플랫폼 일자리가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재단은 특히 ‘스마트시티’에 주목해 왔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과 같은 첨단 기술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혹은 그런 도시를 만드는 사업을 뜻한다. 2020년 서울50+인턴십을 통해 40명의 50+세대가 17개 스마트시티 분야 기업에서 일하면서, 공공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스마트 건축물, 에너지 절감 컨설팅 관련 업무를 맡아 활약했고, 2021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플랫폼 일자리와 관련해서 재단은 2020년 서울50+인턴십에서 공유고용 모델을 실험했다. 공유고용은 한 명의 전문 인력이 여러 고용주에게 시간 단위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각 고용주가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분담하는 형태의 새로운 고용 모델이다. 작년에 20명의 50+세대와 6개 협력 기업이 참여했고, 50%가 넘는 고용 연계율을 기록했다.

1 김병권(2020), “그린뉴딜에서 지역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 『제14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한편 최근에 50+세대 일자리 수요처와 50+세대를 연결하는 다양한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재단은 이런 다양한 플랫폼과 연계,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기술 분야의 수요와 공급을 효과적으로 매칭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런 플랫폼을 통해 50+세대는 보다 효과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갖춘다면 직접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도 있다.



민간의 기술력과 공공의 데이터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자원 발굴 및 연계

출처: 「50+일자리 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50+디지털(온라인) 인프라 운영 적정 활용 방안」,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일자리사업본부 내부자료(2020)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는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 50+당사자에게는 일자리 무대 확장 차원에서 50+세대가 도시와 지역을 잇는 브릿지(bridge)로 여러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미 재단에서는 2019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후원으로 동네와 골목을 바꿀 도시재생 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프로젝트인 <JUMP UP 5060>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세대융합 귀촌모델을 위해 여러 협력기관과 연구모임을 운영 중이며,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본부를 통해 구체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 귀촌 인턴십, 공정여행, 로컬여행 등을 통해 50+의 새로운 경력전환과 창업을 육성하는 도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향후 좋은 일자리를 위해 검토되어야 하는 것들 : 방향과 과제

일자리 대책은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데, 좋은 일자리는 기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어려우니 단기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단기대책은 주로 지역사회에서 수요가 있는 것들을 우선으로, ‘협동에 기초한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집중해야 한다.

오랜 삶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온 50+세대는 본인 스스로가 콘텐츠의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 변화된 일·환경속에서 스스로 노동시간과 형태를 결정하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가상노동자로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미 많은 50+세대들이 한 개의 직업이 아닌 따로 또 같이 동시다발적인 일거리를 갖고 이러한 실험을 펼치고 있다. 2025년, 도래하는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에 점점 부각될 시니어비즈니스는 50+세대에게 다양한 창직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모든 직업 앞에 고령친화(연령친화 Age-friendly)를 붙여 신직업의 다양성이 발휘되고 새로운 창직이 가능하다. (예: 간호사 vs 노인간호사, 부부관계 전문가 vs 고

령자 재혼 내지는 황혼이혼전문가, 변호사 vs 증여·상속·사회환원 전문 노인 전문 변호사 등)

이렇게 재단이 지난 3년간 여러 가지 일 모델을 발굴하고 실험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몇가지 제도적 한계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도 절감하게 되었다. 당장 공유고용 모델만 하더라도 전통적 방식의 고용, 일 관계에서는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노무·인사·계약 이슈들이 있다. 계속해서 계약 관계, 고용 주체, 노사 관계와 같은 기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기존의 프리랜서 혹은 인력파견 사업과 차별화된 질 좋은 새로운 노동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고용과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가 고민되어야 한다. 또, 지금의 어려운 고용상황을 고려할 때 40대 중후반 조기 퇴직자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제도화한 전직지원서비스를 내실 있고, 중복과 누락 없이 추진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단순히 강의실에서 듣는 교육만이 아니라, 50+인턴십과 같이 실제로 본인의 관심분야에서 실습과 경험을 하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어찌보면 100세 시대를 맞아 생애전환기 갭이어(Gap year)²라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50+세대는 다양한 형태의 근무와 노동조건을 원한다. 그래서 전 세계 50플러스 운동을 하고 있는 기관들에서도 갭이어 기간 비용마련을 위한 전환기 비용 부담을 지원하는 개인목적계좌, 양코르법안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 여러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이제는 ‘일’에 대한 인식 전환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새로운 일 모델이 자리 잡기 위해서 우리사회는 유급학습휴가제, 대체고용제, 탄력근무제 등 전통적 개념의 일, 고용관계 틀을 벗어난 새로운 정책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 학업을 잠시 중단하거나 병행하면서 봉사, 여행, 진로탐색, 교육, 인턴, 창업 등의 활동을 체험하며 흥미와 적성을 찾고 앞으로의 진로를 설정하는 기간,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문헌

- 김병권(2020), “그린뉴딜에서 지역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 『제14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일자리사업본부 내부자료(2020), 『50+일자리 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50+디지털(온라인) 인프라 운영 적정 활용 방안』.
- 유창복·이재경·김다예(2020), 『포스트 코로나와 로컬뉴딜』, 미래자치분권연구소 기획, 책숲.

포스트 코로나, ‘전환’에 직면한 50+세대의 현재, 그리고 미래

위기를 기회로 바꿀 50+세대 대응 전략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50+세대의 미래설계 방향은?

2020년 1분기 기준 서울의 50~64세 인구는 약 230만 명으로 전체 서울 인구의 23%를 차지한다. 2020년 정책연구센터 연구보고서 『50+통계분석』에 의하면 2014년과 2017년 한국의 인구변화 추이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등 OECD국가와 마찬가지로 50~54세 인구는 감소하였으나 55~64세 인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도 2011년 대비 2019년에 높아졌으며, 서울시 50+세대들의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자활근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015년과 2018년 모두 응답자의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모든 연령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자원봉사활동 참여 비율도 55~59세 연령은 2015년에 비해 2019년에 증가하였다. 이러한 통계는 전 연령대에서도 50+세대들이 활동 비중이 크고, 일과 사회활동에 대한 지향점도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인구 고령화와 장년층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장년층의 고용 비중은 최근 10년간 증가하였다. 수년간 노동시장 고용증가는 장년층이 주도하는 상황이며, 한국의 청년 및 중년층의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데 반해 장년층의 고용률은 OECD에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50+세대의 경제활동 참여는 당분간 확대될 전망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을 겪으며 예측 불가능의 사회에 놓이게 되었다. 사실 COVID19가 아니더라도 기술 발전이 가져온 미래사회변화는 고용 형태의 변화를 가져와 고령화 사회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훈련과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장 시스템 변화, 건강과 사회보장연금 등의 전통적 사회적 안전망의 범위와 내용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직면해 있었다.¹ 하지만 COVID19가 가져온 충격은 우리 사회를 ‘강제적으로 전환’하게 만들었다. 이 충격은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넘어 물리적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삶 자체가 어려워지는 세계로 우리를 몰아넣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 바뀐 세상에 대한 적응 여부는 **디지털 역량**과 직결된다.

‘코로나 디바이드(Corona divide)’는 COVID19 사태로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으로, COVID19로 인한 경제·고용 충격이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에 더욱 가중되는 상황을 반영하는 말이다. “코로나19가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분석”(장한나, 2021) 자료에 의하면 2020년 3월 워크넷 구직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21.3%를 기록했다. COVID19가 취약계층에는 더 취약하게 사실로 증명

1 서울시50플러스재단(2017), 『서울시50+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되었다.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에 따른 차별이 특징적이다. 대면을 서비스로 하는 직종 종사자들과 온라인 기반의 직종 종사자들은 생계에서도 큰 차별을 보였다. 직업 외에 교육과 학습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사용이 쉬운 계층은 비대면 상황에서 수업을 받거나 계속되는 활동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 놓여있지도 않을뿐더러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자체가 없는 경우엔 이 비대면 사회에서 그야말로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현상에 놓인 것이다. 물론 이 변화는 어떤 계층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할 것이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은 온라인 활용에 능통한 이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겠지만 디지털 역량이 없는 이들은 더 빨리 뒤처지게 될 것이다. COVID19가 가져온 양극화의 중요한 분기점은 결국 ‘디지털 리터러시’, 즉 디지털 기술 능력이다. 일상생활에서 스마트 기기와 소셜 미디어 활용은 기본이고 인터넷을 통해 영상미디어를 소비하고 또 생산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표준이 될 것이다. 이런 변화 속에 50+세대는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1. 변화하는 일자리 환경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

WEF(2016)는 앞으로 디지털 그린 전환 사회변화에서 요구되는 역량은 ‘복잡한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 창의성, 대인관계(관리)’ 등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박가열 외(2017)는 ‘의사결정, 사회적 기술, 창의성, 복잡한 문제해결력’ 등을 언급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공통으로 언급하고 있는 역량 가운데 ‘사회적 기술, 복잡한 문제해결력, 대인관계(관리) 및 의사결정’ 등은 50+세대가 그들의 경험을 통해 보유하고 있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창의성, 뉴미디어 문해력 및 IT 활용력, 혁신, 다문화’ 등의 역량은 강화해야 할 부분이다.

2. 킥 경제(Gig Economy)와 플랫폼(Platform) 노동의 등장

직장 이동 빈도가 증가하고 재택근무가 확대되며 고용관계는 수요 중심 서비스로 변화하였고 산업현장에서는 필요에 따라 사람을 구해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형태가 확산되고 있다. 노동환경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킥 경제와 플랫폼 노동의 등장이다. 표준 고용관계와는 다른 형태로 노무의 제공, 재화의 판매, 재화의 대여를 수행하되, 단기 계약을 맺고 대가를 받는 노동을 ‘독립노동(Independent Work)²’이라고 한다. 2011년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130만 명 규모였던 ‘특수형태 고용종사자’는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서는 210만 명으로 늘었다. 동일한 조사에서 집계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까지 합치면, 독립노동의 규모는 전체 취업자 2,709만 명의 17.3%인 약 470만 명에 달한다.³ 이처럼 킥 근로자(Gig Worker)⁴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은퇴 후 자신의 경험과 경력을 살려 창업, 창직, 프리랜서 등의 활동을 이어가려고 하는 50+세대의 경력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킥 경제로의 변화와 디지털 플랫폼은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구직활동도 용이하게 보이지만 현재까지는 청년층에게 유리하다. 또한 COVID19 확산 이후 플랫폼 노동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음식배달원,

2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McKinsey Global Institute).

3 서울시50플러스재단(2020), 「일·활동 온라인 플랫폼 수요조사 연구」.

4 독립적인 계약자나 컨설턴트로서 필요에 따라 유연한 계약을 통해 특정한 업무를 완수 또는 지정된 시간 동안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함(Friedman, 2014).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종사자, 가사도우미, 프리랜서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⁵ 그러나 플랫폼 노동시장은 여러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고 그 범위는 무궁무진해 앞으로는 50+세대에게도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기 각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운전과 배달, 숙박 등으로 한정된 직무에서 이제는 그 분야가 엔지니어와 변호사 등의 전문 직종으로 확대되고, ‘나인 투 식스(9시 출근 6시 퇴근)’의 전통적인 노동시간에 대한 개념 또한 붕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사실상 정규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중장년 계층의 고용 접근성의 기회를 늘릴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온라인 고용서비스 확대는 중장년층에게도 호재일 수 있다. 디지털 기반의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고용 접근성을 확보한다면 50+세대도 각 경제로 인해 넓어진 고용기회의 수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디지털 역량에 대한 오해와 진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변화는 취업을 위한 노동환경이나 일자리에 국한된 이야기만은 아니다.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역시 디지털을 통한 정보의 접근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대신에 화상통화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원격의료 시스템에 익숙해져야 한다거나 식당 내 키오스크를 이용한 주문은 필수가 되었다.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에 대한 문해력, IT 활용력 등의 디지털 역량이 사회참여 수준을 결정한다. 문제는 인생 2막에 대한 동기요인을 명확하게 형성하지 못한 많은 50+세대는 여전히 디지털 역량에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디지털 활용 사회참여 측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을 낳는다. 그런데 서두에서 밝힌 대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는 반강제로 디지털 전환에 놓여있기 때문에 50+세대는 먼저 자신의 디지털 활용 정도와 능력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능동적으로 디지털 역량을 익히고자 하는 마음 먹기와 인식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서울시50+세대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3개년 평균 85%로 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디지털 정보화 접근 수준은 101.1%, 역량 수준은 72.3%, 활용 수준은 91.1%로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⁶ 이렇게 보면 서울 장노년층의 디지털 정보화 접근, 역량, 활용 격차는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50+세대 온라인 활동 특성을 살펴보면, 50+세대가 인터넷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활동은 이메일, SNS, 문자 메시지라고 한다.⁷ 50+세대는 대부분 모바일기기를 PC보다 더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모바일기기 사용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세대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는 ‘블로그, 네이버 밴드, 카페,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이다. AI 등 신기술에 대한 습득은 긍정적이기도 하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2020)에 의하면 COVID19가 유행하는 동안 5060세대의 간편 결제 이용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음악,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업 사용이 전년 대비 101% 증가, 배달앱이 99%나 증가했다.⁸ 온라인 리테일 마켓인 마켓컬리에 따르면 5060회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12%, 122% 이상 증가하였고 50대 이상 회원 매출은 120% 증가하였다.⁹ 사실 현재 5060세대로 일컫는 베이비붐 세대나 386세대는 디지털에 익숙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변화에 따른 디지털화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

5 「성남시 플랫폼 노동자 근로 실태와 정책과제」(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의하면 음식배달원을 제외한 대리운전기사와 퀵서비스 종사자, 가사도우미는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6 한국정보화진흥원(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연구」.

7 서울시50플러스재단(2020), 「일·활동 온라인 플랫폼 수요조사 연구」.

8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2020), 이슈&트렌드: “집콕생활, 시니어도 디지털 세상속으로”, 「50+리포트」 4호 (통권22호), 서울시50플러스재단.

9 구철모(2020), 이슈&트렌드: “코로나19로 달라지는 관광·여가·생활 그리고 소비의 변화”, 「50+리포트」 4호 (통권22호),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인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들의 디지털 문해 능력이 높다고 평가하기엔 여전히 개인적 차이가 크다. 특히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은 90% 이상이지만 ‘역량’은 51.6%로 다른 계층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활용’도 63.9%에 머무는 상태처럼¹⁰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격차는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디지털 역량에 대해서 이처럼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의 세상은 디지털이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다루지 못하면 햄버거도 커피도 주문하지 못하는 세상이다. 불과 1년 사이에 키오스크 설치 매장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COVID19가 가져온 생활 변화다.

이와 같이 디지털 역량에는 단순히 모바일, PC 이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50+세대가 디지털 접근성이 좋고 SNS 활용, 유튜브에 대해선 친화력이 높지만, 교통정보, 지도, 은행, 행정서비스 이용, 제품 구매 및 예약 검색 등의 디지털 기반의 생활 서비스 외에 정보생산 또는 공유 활용률, 온라인 경제참여 활용률을 따지면 50+세대의 마켓 트렌드가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말한 GIG 플랫폼의 시대에 50+세대는 ‘경제활동의 주체로 적응할 준비가 되었는가?’하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이보다는 개인의 경력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가 가능한 번역이나 운세 상담, 타이핑 업무, 명함이나 로고 만들기, 카피 라이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구인·구직 전문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매칭되고 있는 현실에서 50+세대는 디지털 및 플랫폼 경제 시대로의 빠른 전환을 맞이하는 자세와 더불어 디지털 역량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50+세대의 미래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퇴직을 준비 중이거나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50+세대가 잘 적응하고 변화를 따라가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50+세대라 일컫는 이들은 이보다 더한 질곡의 파도를 넘어온 세대가 아닌가. 어느 시대에도 도전과 변화는 있어왔다. 패기나 동력이 예전과 같지는 않을지라도 COVID19로 맞이하게 된 이 ‘전환’이라는 변화를 비관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인생 2막을 설계하는 50+세대에게 던지는 질문 중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70대, 80대가 됐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이다.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했지만 50+세대는 상대적으로 젊고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열정도 충분한 나이이다. 동력이 남아있을 때 무엇인가 설계하지 않는다면 70대 80대를 대비할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비록 반강제이긴 하지만 디지털 세계로의 전환은 50+세대에게도 위기이면서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은퇴 후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생성하고 더 나아가 협동조합 등의 단체를 만들거나 각자가 경력을 활용해 프리랜서 등으로 양코르커리어를 준비할 때 노동 플랫폼의 활성화라는 새로운 고용시장의 확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일의 종류와 형태를 기대할 수 있다. 꼭 취업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뿐 아니라 창의력만 있다면 스스로 일을 만들어내기도 용이해진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정보와 가치를 공유하고 합작·공조하며, 그간 하고 싶었지만 역량이 부족해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다양한 협업을 통해 해낼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젊은 층보다 오히려 50+세대에게 유리할 수 있다.

2020년 5월, COVID19로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가 전면 휴관으로 들어간 지 2개월 만에 교육과정 일부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교육과정 담당자조차도 전문가가 아니었기에 좌충우돌 속에서 준

10 한국정보화진흥원(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연구」.

비하였으니 50+당사자들은 어떠했겠는가. 과연 50+세대가 이 온라인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온라인 화상 플랫폼에 적응할 수 있을까 우려들이 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온라인 교육과정에 대한 50+세대의 반응은 뜨거웠다. 처음 접하는 온라인 과정에 “어렵다기보다는 신선하다”, “재미있다”는 반응과 “이렇게라도 접속을 해서 사람과 접촉하니 기쁘다”는 의견들이었다. 비대면 시대 50+세대의 나아갈 방향에 많은 생각을 들게 만들었다. 교육 과정 뿐만이 아니다. 이제는 학습 외 50플러스의 활동을 영상으로 녹화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송출하기도 하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쓰던 물건을 경매하는 행사까지 진행한다. 토크 콘서트도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커뮤니티 랜선 파티까지 경험했다. 캠퍼스 교육과정은 2021년 현재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비대면과 온라인의 세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온라인, 비대면의 세계를 50+세대가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려고 노력하는 측은 두 개로 나뉜다. 바로 위의 캠퍼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변화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50+당사자 촉과 전환을 도우며 지원하는 측이다. 일·활동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50+세대의 인식과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¹¹에 의하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재취업·창업·새로운 일·활동을 탐색하거나 시도 중인 50플러스재단 이용자(50+포털 회원 표본, 이하 ‘재단’)와 그렇지 않은 일반 50+세대(일반 온라인 패널 표본) 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 재단 이용자는 40%가 퇴직 후 활동에 대한 탐색을 시도 중이었지만, 일반 50+세대는 18% 정도만 퇴직 후 활동에 대한 탐색을 시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된 일자리에서 종사중인 사람들 중에서도 재단 이용자는 75%가 향후 계획을 탐색하거나 준비 중이라고 답한 반면, 일반 대상은 46%에 불과해 재단 이용자가 30% 가까이 더 높은 수치를 보임으로써 일반 50+세대에 비해 재단 이용자들이 새로운 일·활동을 탐색하는 데 더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50+포털 이용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재단 이용자가 76%, 일반 50+포털 이용경험자가 69%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는데 포털을 통한 취업·창업 정보, 50+세대 맞춤 정보, 최신 정보,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전문적인 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재단 이용자가 일반 50+세대에 비해 인생 2막을 위한 관심과 준비를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점으로 해석되며 전환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50플러스재단과 캠퍼스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반증이다.

이와 같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 평생교육기관, 일자리지원기관,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같은 정책지원 기관과 50+세대는 각각의 역할을 통해 급변하는 현 상황을 적응해야 할 것이다. 50+세대는 리스킬링(Reskilling)과 업스킬링(Upskilling)에 적극 임해야 한다. 외국어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시장성 등을 배우고 여러 공청회 등에 참여하고, 폴리텍대학, 중장년창업기술센터 등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기관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 형태는 50+세대의 리스킬링을 위한 좋은 장치인 만큼 지원 제도를 눈여겨보고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학습도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가 앞당긴 스마트복지가 곧 실현될 것이라는 예측 속에 지금의 50+세대들은 노인세대가 디지털 세계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구체적으로 디지털문해 강사, 키오스크 도우미 등)을 담당하길 바란다. 이것은 멀지않은 미래, 자신들이 노인 세대가 되었을 때 스마트 복지 시스템에 잘 적응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요긴할 수 있다.

11 서울시50플러스재단(2020), 「일·활동 온라인 플랫폼 수요조사 연구」

포스트 코로나가 가져온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에 더하여 지원 시스템의 도움이 절실하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이 변화의 파도를 헤쳐 나가는데 조금은 버거운 50+세대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디지털 역량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동체적 연대, 사회적 관계를 갖도록 노력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속에 이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해 ‘전환’이라는 변신에 성공한 50+세대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구철모(2021), 이슈&트렌드: “코로나19로 달라지는 관광·여가·생활 그리고 소비의 변화”, 「50+리포트」 4호 (통권22호), 서울시50플러스재단.
- 김현곤(2019), “시와 고령화 시대의 일과 교육”, 「미래2030(FUTURE2030 시리즈)」,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본부 미래전략센터.
- 박가열·천영민·홍성민·손양수(2017),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서울시50플러스재단(2017), 「서울시50+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 서울시50플러스재단(2019), 「장노년층 디지털 역량 실태와 정보화 교육과정 운영방향」.
- 서울시50플러스재단(2020), 「50+통계분석」.
- 서울시50플러스재단(2020), 「일·활동 온라인 플랫폼 수요조사 연구」.
- 신한카드빅데이터연구소(2020), 이슈&트렌드: “집콕생활, 시니어도 디지털 세상으로”, 「50+리포트」 4호 (통권22호), 서울시50플러스재단.
- 장한나(2021),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변화”, 「코로나19 이후 고용위기 대응과 정책과제」 세미나 자료집,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고용정보원(2020), 「성남시 플랫폼 노동자 근로 실태와 정책과제」.
- 한국정보화진흥원(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연구」.
- 황윤주(2020),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사례를 통해 본 ‘생애전환지원사업’의 성과 및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과제”, 「2020년 제1회 생애전환지원포럼」 자료, 서울시50플러스재단.
- 황윤주(2020), “위기를 기회로 바꿀 50+세대 대응전략”, 「50+일자리 특별포럼」 자료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
- Friedman, G(2014), Workers without employers: shadow corporations and the rise of the gig economy, Review of Keynesian Economics, 2(2), 171-188.
- World Economic Forum(2016), Future of Jobs, Geneva: World Economic Forum.

5 0 +
리포트
2021

2021년 01호 Volume 25

01

Issue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동참하는 50+세대

이슈 PICK
36
그린 뉴딜 정책으로의 전환,
그리고 50+세대
정훈

이슈 PICK
40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50+세대
이지연

이슈 PICK
44
지역에서 가능한 그린 뉴딜 일자리
이유진

50+정책연구
49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50+세대를
위한 그린 뉴딜 일자리 정책
임소현

글로벌 50+
53
미국 메릴랜드 부양 지원 서비스
박민경

글로벌 50+
57
중국, 60대 이상 고령층 빈곤화
막기 위해 주력
임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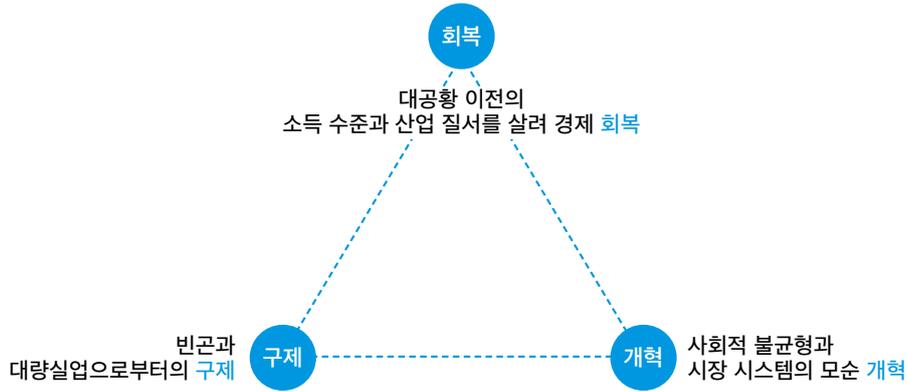
그린 뉴딜 정책으로의 전환, 그리고 50+세대

최근 우리 일상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사회 이슈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가 될 수 있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폐렴이 발생하여 도시가 봉쇄됐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급속도로 전 세계에 퍼져 사망자가 속출하고, 국경이 봉쇄되고 학교와 직장이 폐쇄되고 가족 간, 지인들 간 모임이 금지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측을 못했을 것이다.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세계를 변화시켰다. 국가 간 봉쇄 조치와 경제활동 금지로 세계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고, 시민들은 재택근무와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되며 준비되지 않은 채로 언택트 시대로 접어들었다.



코로나19로 몸살을 심하게 앓았던 2020년, 우리는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 현상도 동시에 겪어냈다. 세계 곳곳에서 폭염, 홍수, 호우, 산불, 폭설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작년 여름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와 연이어 발생한 태풍으로 전국 곳곳에서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 이제는 누구도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세계는 지금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를 겪고 있고,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분배 악화로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경제는 2019년 대비 7.9% 감소한 -5.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유럽은 2020년 잠정 경제성장률이 -6.4%를 기록하여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역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미국은 작년 한 해 약 3조 달러의 재정 부양에도 -3.5%의 역성장을 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4년만에 최악의 경제침체를 겪고 있으며, 빈곤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예기치 못했던 급격한 변화와 충격은 그간 우리가 추구해왔던 경제발전과 풍요로움이 사회·경제 구조와 시스템의 변화 없이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것이 최근 각국에서 그린 뉴딜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본래 뉴딜 정책은 1930년대 대공황 극복과 경기 회복을 위해 미국에서 추진했던 정책으로, 사회적 합의(Deal)에 기반하여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구제(Relief), 회복(Recovery), 개혁(Reform)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구제는 빈곤과 대량실업으로부터의 구제를, 회복은 대공황 이전의 소득 수준과 산업 질서를 살려 경제를 회복하는 것을, 개혁은 사회적 불균형과 시장 시스템의 모순을 개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테네시강 유역 개발 등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 은행과 금융개혁, 노동제도·사회보장 제도 개혁, 시장 활성화 및 농업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이 뉴딜 정책으로 미국은 경기 회복뿐 아니라 자유방임주의 종언, 독점자본주의 모순 시정과 미국 복지제도의 토대를 형성하여 철학·이념·제도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었으며, 대공황이 지난 이후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드는 토대가 되었다.

당시의 뉴딜 정책이 지금의 그린 뉴딜과 다른 점은 환경문제라 할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며 세계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탄소 사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IPCC¹는 2018년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를 채택하여 지구 기온상승을 1.5°C 이내로 제한해야 할 당위성과 이를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도 남은 잔여 배출량을 흡수하여 순 배출량은 제로가 되는 상태)을 달성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의 급속한 증가로 지난 100년간 1°C 정도 상승한 지구의 평균 기온은 최근 들어 10년에 0.2°C씩 오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15년 파리협정에서 약속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모두 달성한다 해도 금세기 말에 3°C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 그린 뉴딜을 제안한 것은 미국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었다. 2019년 2월, 미국 하원에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0%를 차지하는 미국이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그린 뉴딜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을 통과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근 당선된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2조 달러 투자 계획을 담은 그린 뉴딜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어 향후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EU에서는 2019년 12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산업 및 순환경제, 건축, 수송, 친환경 농식품, 생물 다양성 관련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최소 1조 유로를 투입할 계획이다. 여기

1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에는 일자리 창출, 경쟁력 향상, 공정 전환을 포함하여 기후와 양립 가능한 지속가능 경제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담고 있으며, 그린딜의 법적 구속력 확보를 위해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까지 제안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은 2020년 7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사회 구조 전환을 목표로 수립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디지털 뉴딜과 함께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한다는 방향성과 함께, 2025년까지 총 73.4조 원(국비 42.7조 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과 65.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가 담겨있다. 그리고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이후 국회에서는 그린 뉴딜 기본법이 발의되고 있어 이 법이 통과된다면 탄소중립과 그린 뉴딜이 앞으로 변화되는 우리 사회의 밑그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 뉴딜에서 제시된 대표과제를 살펴보면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있으며, 융복합 과제까지 확대하면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단까지 포함될 수 있다. 세부 추진과제로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과 저탄소·분산형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의 세 가지 분야에 총 8가지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요약하면 에너지 생산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고, 지능형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수요처인 산업·가정·수송·공공 분야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에너지전환과 혁신이 그린 뉴딜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

한국 그린 뉴딜 계획의 추진과제 및 투자 계획

대표과제	세부추진과제	투자계획	일자리	
그린 리모델링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6.2	24.3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2.5	10.5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3.4	3.9	
소계		12.1	38.7	
그린 에너지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2.0	2.0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9.2	3.8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13.1	15.1	
소계		24.3	20.9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3.6	4.7	
그린 스마트 스쿨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2.7	1.6
		소계	6.3	6.3
스마트 그린 산단	합계	42.74	65.9	

사실 에너지는 역사적으로 사회적·경제적 변혁을 이끌어온 원동력으로, 에너지전환과 사회변화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차례에 걸친 산업혁명을 겪는 동안 석탄에서 석유와 전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까지 새로운 에너지원이 등장하며 산업발전과 시대 전환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지금의 전환은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근현대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던 화석연료를 버리고 환경 친화적인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며, 기존에 겪어왔던 전환과는 그 변화의 정도와 파급효과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비용 효율적이고 양적 성장을 최우선으로 했던 경제성장 논리를 버리고 비용이 더 소모되

더라도 질적인 성장을 우선시하고 사회적 포용과 환경과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단발적인 정책 수립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산업과 국민 모두가 동참하고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함께 변화해야 한다. 과거 전환의 시기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지금까지의 에너지전환 정책만으로도 주민 수용성 문제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지금, 앞으로 더 큰 난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50+세대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과 경제발전을 주도해온 기존 사회 시스템의 형성 책임자이자 앞선 시대를 경험해온 사회의 어른으로서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환하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학교 연구결과에 따르면 50+세대는 단순한 취미 활동보다 사회적 기여 등에 대한 동기가 강하고,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모임 등과 같은 사회 참여 성격의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다고 한다.

이러한 50+세대가 먼저 그린 뉴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장기적인 정책 이행에 동참한다면 현 세대가 직면한 기후변화,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갈등 문제와 같은 시대적 유산이 다음 세대에 대물림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2020.7.1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안준호(2021.2.4). “그린뉴딜의 명(明)과 암(暗)”, 전기저널 <http://www.keaj.kr/news/articleView.html?idxno=3890>
- 윤순진(2021.1.7). “한국판 그린뉴딜의 현재와 과제”, 전기저널 <http://www.keaj.kr/news/articleView.html?idxno=3838>
- 최순식(2020). “4차산업혁명시대의 시니어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21(5), 21-37.
- 한성호·박일호·진경배(2020).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 50+세대의 실천 과제와 역할」, 서울시50플러스재단 50+당사자연구 연구보고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50+세대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체크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매일 걱정하는 세상이다. 집 밖에 나가는 일은 물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불편해졌다.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쓰고 재난 문자를 받는 게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걱정하다가도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기에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그런데 대체 우리가 회복하려는 그 '일상'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나쁘다. 세계보건기구(WHO) 대기질 권고 기준을 두 배나 초과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조기 사망률이 증가하고, 아동·임산부·어르신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도 최상위권에 해당한다.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최하위 수준이니 이런 환경 성적표를 받는 건 당연할지도 모른다.



사실,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기존의 일상은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일상이었다. 과도한 화석연료 소비와 자원 낭비로 인해 온실가스가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3°C 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과학자들은 경고한다. 지구 온도 1°C 상승에 폭염, 태풍, 폭우, 가뭄과 같은 자연재난은 극심해졌고 수많은 생명과 재산 손실을 겪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1°C의 온도 변화는 미미한 날씨 변화 그 이상의 문제임에 틀림없다.

과거 지구에서 일어났던 다섯 번의 대멸종은 운석이나 화산폭발과 같은 자연적 기후변화 때문이었으나, 현재는 산업적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여섯 번째 대멸종의 문턱에 다다랐다. 과거 멸종과의 차이점은,

공룡은 자신이 멸종할 줄 몰랐다면 인간은 멸종을 인지하면서도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경로를 바꿀 수 있을까?

코로나, 미세먼지, 기후위기

물론 기회는 있다.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폭을 1.5°C 수준으로 억제한다면 ‘찜통 지구’로 빠지지 않고 생명이 생존 가능한 기후로 안정화시킬 수 있다. 196개국 이 합의한 ‘파리협정’에서 이 공동 목표가 명시된 까닭이다. 2015년 합의된 파리협정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행된다.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배출 제로(0)를 달성해야 한다. 사실상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

석유로 움직이는 자동차·선박·항공기, 석탄으로 생산되는 전기와 열, 가스로 공급되는 난방과 온수, 기계와 화학비료에 의존한 식량 생산 방식... 현재 경제와 생활을 지배하는 주된 에너지원인 화석연료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에 기반해 새롭게 경제 구조를 짜야 한다는 건 상상조차 잘 되지 않는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화력발전소와 같이 탄소 집약적 업종의 산업계와 일자리를 고려한다면 문제는 더 간단하지 않다. 기후위기 대응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좋은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경제·사회 구조의 대대적 재편 또한 불가피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은 야기될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 대응이 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 경로는 지금까지의 경험 수준을 넘어선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지구가열화를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평균 약 7%씩 줄여야 한다. 지금껏 줄어들기는커녕 과거 경제 위기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이는 전례 없는 대응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와 방역 조치로 지난해 전 세계의 경제가 멈췄고, 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7% 줄었다고 추산됐다. 굳이 비유하자면, **세계가 코로나와 같은 충격을 향후 10년 동안 매해 겪는 정도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야 성공적인 기후위기 대응 경로로 가는 셈이다.**

앞으로 우리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인프라시설을 더 이상 추가하지 않고 기존의 교통, 에너지, 건물, 식량, 재정 등 시스템 전반을 뜯어 고쳐야 한다. 정부와 국가기관이 나서서 대규모 투자와 지출을 끌어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에 맞는 제도와 세제 개편도 불가피하다. 이것이 필자가 기후위기 대응을 ‘전시’에 비유하고 비상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맞은 가운데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한 대목은 시의 적절하다. 현재 추구해야 할 회복은 과거 회색 경제로의 회복이어서 안 된다. 경제가 어렵다는 명목으로 온실가스를 양산하는 토건 개발 사업과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을 되풀이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정부의 공공 재정을 재생에너지, 친환경 교통 시스템,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생태계 회복과 유기농업의 진흥과 같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녹색 산업과 일자리의 기반을 만들 때이다. **지금부터 경제 전반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탈탄소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통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상태)을 만들어가야 한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

기후변화는 먼 훗날의 문제일까? 기상 기후는 앞으로 더 극심해질 전망이다. 때문에 청소년이나 어린 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과 부담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구 온도가 1°C 오른 현재, 이미 기후는 가혹한 반격을 가하고 있다. 한국 역시 최근 역사상 최악의 폭염과 장마를 경험했다. 신체적·경제적으로 약자일수록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가장 먼저 받게 될 것이다. 기후위기는 지금 당장의 현실이다.

아울러 기후변화는 비가역적인 문제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는 일단 대기 중에 방출되면 수백 년간 잔류하면서 온실효과를 지속적으로 일으킨다.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C 이상 상승해버리면 기후 시스템은 ‘한계치를 넘게 늘어난 용수철’처럼 되돌아올 수 없게 된다. 오늘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내일의 기후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결국 5년 내지 10년 사이 취할 변화와 경로에 따라 앞으로 살아갈 기후 환경의 미래가 정해진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현 세대가 기후위기를 해결할 마지막 세대라는 의미다.



기후위기를 자각한 청소년들은 학교 밖으로 나와 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래가 없어질 판에 정부가 미래를 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왜 학교에 가야 하느냐?”는 주장이다.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¹는 2019년 유엔 회의장에서 “사람들이 고통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멸종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전부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에 대한 것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라며 절규에 가까운 연설을 했다.



1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 2003.1.3.)는 스웨덴의 환경운동가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영향으로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졌고 2018년 8월, 스웨덴 의회 밖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기후행동을 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전 세계적인 기후 관련 동맹휴학 운동을 이끈 인물이다. 2019년 타임 올해의 인물에 선정되었으며, 2019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선정되었다. [출처] 위키백과

기후위기 속에서 50+세대의 역할

50+세대는 청소년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할 수 있을까? 50+세대는 고도 경제성장기와 그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와 삶의 궤적이 나란히 한 세대로 그려지지만, 반대로 기후위기의 해결사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 기후변화의 산 증인이다. 기상 재난의 경험이든 농사나 자연 관찰의 경험이든 오늘날 기후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삶의 경험을 통해 기후위기를 직시하고 어린 세대와 대화하는 일 자체가 값진 의미를 가질 것이다.

아울러, 50+세대가 가진 경제력과 그에 따른 선택권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중요하다. 개인적 관찰에 의하면, 대부분의 50+세대가 젊은 세대에 비해 검소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릴 적부터 몸에 밴 절약 습관 때문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큰 집, 큰 자동차, 대형 가전제품을 선호하는 모습과는 대조된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오늘의 선택이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건물, 자동차와 같은 자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새롭고 낯선 것을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 가령, 승용차를 바꾸야 할 상황이라면 전기차로 선택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능하면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낫지만 말이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도 충분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누구나 소유하고 운영 가능한데다 기존의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하는 효과도 갖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에 유의미하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판매와 수익 확보가 보장되는데다 태양광 등 설치비용은 꾸준히 떨어지기 때문에 유익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건물 옥상이나 유휴부지가 있다면 개인이나 공동체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기와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동참하는 방법도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정치 세력을 오히려 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지지가 소홀하다면 정치권은 더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기후와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인이 더 많아져 우리 사회와 지역이 변화할 때이다.

참고문헌

- 김병권(2020).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 책숲.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2020). “2020 삶의 질(How's Life? 2020 : Measuring Well-being)”.
- 유엔환경계획 UNEP(2020). “Emissions Gap Report 2020”.

지역에서 가능한 그린 뉴딜 일자리

“텀블러를 쓰고 전기를 아껴 쓴다고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 같은데, 시민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요즘 부쩍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 54일간의 장마로, 우리나라 쌀 생산량은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겨울은 -20°C 가까운 한파 다음날 봄날같이 온도가 올라가는 등 들쭉날쭉하였다.

기후위기의 원인은 인간 경제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에 있다. 우리가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를 태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평균기온을 올리면서 발생한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7월, 그린 뉴딜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위해 2025년까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분산에너지 확대, 녹색산업 활성화에 73조 4,000억 원을 투자, 65만 9,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산업을 키워 녹색일 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정부는 임대주택 22만 5천 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와 의료시설 2,000여 동, 문화시설 1,000여 개 등 공공건물의 단열을 개선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건물 단열개선사업에 건물 자재, 시공, 감리 등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오래된 학교건물 2,890동도 그린 리모델링을 한다. 환경부는 전국의 25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그린스마트도시 공모사업도 진행했다.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늘리고,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 전기차 충전기는 1만 5,000대(급속), 수소 충전소는 45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처럼 건물·에너지·수송 분야에서 녹색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정부의 그린 뉴딜은 규모가 작고, 대기업 지원 중심이라는 비판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녹색산업 관련 일자리를 만들기에는 예산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연간 600조 정도의 예산을 그린 뉴딜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 뉴딜이 지역의 일자리로 연결되려면

정부가 그린 뉴딜로 만들겠다는 65만 9,000개의 일자리도 시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숫자이다.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체감할 수 있는 녹색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지역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에 어떤 것이 있을까?

온실가스를 줄이는 활동이 임금을 받는 일자리가 되려면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행위를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업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야만 한다. 둘째, 에너지와 자원에 대한 가치나 비용을 높게 책정해 효율을 높이고, 재사용·재활용하는 일에 사람과 기술이 투입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정부의 지원금도 필요하지만 이 일이 지속 되게 하려면 ‘제도 개선’이 먼저다.

서울에서 그린 뉴딜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

2020년 7월 8일, 서울시도 그린 뉴딜 정책이 발표되었다. 2022년까지 2조 6,000억 원을 투입해 건물, 수송, 도시 숲,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등 5대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여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다. 2021년 4월 보궐선거로 당선한 서울시장의 그린 뉴딜 정책을 어떻게 이어갈지는 미지수이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그린 뉴딜에 대한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 시민들이 필요한 것은 폭염과 한파를 견디는 안전한 집, 편리한 공공교통과 폐기물을 만들지 않는 자원순환, 집 근처에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공원이다.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자치구에서는 이상기후 재난에 대비해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고, 새로 짓거나 노후화된 건물은 에너지 제로(0) 건물로 그린 리모델링하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교육을 하고, 공원을 늘리고,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는 시민들도 재난에 대비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위기 시대에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는 시민들에게 인건비를 지불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 정책을 연계해 서울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린 뉴딜 일자리는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다.

노후주택 그린 리모델링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재임한 이후 첫 번째로 한 사업이 저소득층의 집수리 단열개선 사업이다. 총 50억 달러(5조 6,000억 원)를 투입해 3년 동안 1백만 가구를 수리하였고, 온실가스를 감축시켰으며, 단기간에 많은 일자리를 새로 만들었다. 보조사업비 1달러 투입 당 에너지편익은 1.72달러, 비에너지 편익은 2.78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켰다.

불볕더위와 한파가 점점 심해질수록 에너지 비용이 더 드는데, 이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노후주택 리모델링은 기후위기 적응 사업으로도 펼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집수리사업단을 통한 ‘서울가꿈주택사업’¹을 펼치고 있다. 2020년 8월까지 약 1,600여 가구를 시공한 결과 주택의 에너지성능이 약 30~40%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에 노후주택 1만 동을 단열 개선하면 예산은 약 700억 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1,500억 원 규모의 시장이 만들어지고 일자리와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치구 또는 동 단위로 인적자원(동네 설비업체, 집수리 사업, 설비제품 업체 등), 기술자원 등을 조사해, 지역 주민들이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를 진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동작구 상도 3동 성대골에서는 설비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마을기술자들과 주민들이 마을주택 단열개선 사업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 ‘서울가꿈주택사업’은 노후한 주택을 고쳐서 살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되거나 공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 불편함을 참고 사는 주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집수리 비용을 보조하고 전문가 파견 등으로 체계적인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처] 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노후주택 수리비 신청하세요! ‘서울가꿈주택’ 접수 중”,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227819>

태양광발전 협동조합

서울시는 공공기관 지붕 햇빛펀드,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보급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왔다. 서울의 재생가능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옥상임대 또는 건물주 태양광발전 모델, 10kW 소규모 태양광 확대 방안, 금융 상품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모든 신축건물에 대해 태양광발전을 의무화했다. 서울에서는 약 20여 개의 태양광발전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심 주택과 공공건물, 상업 건물을 모아 수요반응(DR: Demand Response)사업,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를 연계한 전력중개 사업도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계절별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제를 달리하면, 시민들은 값이 비싼 시간대에 전력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 서대문구에서는 수요자원시장,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모아 가상발전소(Virtual Power Plant)를 만들고, 이런 전력생산 또는 수요관리 자원을 하나로 모아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스마트에너지공동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시민들이 도시에서 에너지서비스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모델인데, 이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전력요금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폐기물관리와 자원순환

폐기물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 강화는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프랑스는 ‘음식물 낭비와의 전쟁 관련 법’을 시행해 슈퍼마켓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자선단체나 푸드뱅크에 기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그 결과 버려지는 식재료가 줄어 온실가스 감축, 푸드뱅크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만드는 스타트업 기업 ‘트래쉬 버스터즈’가 축제때 공유 식기를 대여·회수·세척·살균·재사용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나아가 지역사회 소비자와 공급자가 협력하여 재래시장이나 중소기업 상가에서 근거리 거주 소비자와 함께 1회용 포장용기를 다회용기로 전환하는 사업으로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성남자원순환가게 re100’², ‘은평구 모아모아’³ 등 주민참여 재활용·분리수거 모델이 확산하고 있고, 서울시 업사이클링 센터 구축 등 재활용 수집과 판매 분야 사회적기업이 등장하고 있다. 동네에서 재활용 수집과 판매에 대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만들어져 지역순환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은평구에서 실시한 ‘자원재활용 그린 모아모아’

출처: 은평시민신문, <https://www.e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1369>

- 2019년 6월부터 성남시와 성남환경운동연합, 신흥2동 마을기획단, 재활용업체가 협력해 만든 가게 이름이 ‘신흥re100’이다. ‘re’는 recycling의 ‘re’, 숫자 100은 100% 재활용하고 100% 보상한다는 의미다. 재활용 유통체계를 변화시켜 질 좋은 고부가가치의 재활용품으로 순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출처]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074555&memberNo=30808385&vType=VERTICAL>
- ‘자원재활용 그린 모아모아’는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품 선별율을 높이고자 기존의 한 봉투에 전 품목을 담아 배출하던 것을 주 1회 지정 장소에 8가지 품목으로 분리 배출하는 사업이다. 자원 재활용도를 높이고 중간 분리과정 단계를 축소해 재활용품 선별과 수거에 드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출처] 전국 매일 신문, “은평구, 2020년 적극행정 ‘자원재활용 모아모아 사업’ 선정”, <https://blog.naver.com/seouldesks/222199441378>

전환센터와 기후에너지환경 교육

현재 그린 뉴딜 일자리로 현실성이 높은 분야는 기후교육 부문이다. 시민을 포함해 유치원, 초·중·고, 대학 특성에 맞는 기후 에너지 환경 교육과 생활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생존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마련, 전문 강사 양성, 예산을 지원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교육하고 실천하는 거점공간으로 전환센터가 만들어지면, 지역사회 정보와 관계망이 구축되고, 시민주도의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다. 전환센터는 시민들에게 조명, 냉·난방 기기 효율개선, 집수리 단열개선 사업, 태양광 설치에 대한 정보와 지원제도를 제공할 수 있다.

생태계 조사와 관리

공원과 녹색지대, 강 하천의 생태 복원, 지역의 생물다양성 조사와 보호 활동에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은 현재 서울의 셋강생태공원과 장항습지를 위탁 관리한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강 가꾸기, 생물다양성 보호, 생태계 조사는 사회적경제로서의 확장성이 높은 분야이다. 도시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 공원을 관리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의 공원 이용과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돌봄과 재난에 대한 안전

코로나 이후 여성의 돌봄 노동이 가중되고 있다. 기후위기와 고령화 대비,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어린이 돌봄 서비스를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확산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지역공동체가 폭염, 한파, 태풍, 홍수와 같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기후재난에 대비해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도 일자리가 될 수 있다. ‘마을재난학교’를 열어 재난대비 매뉴얼을 만들고 훈련하며, 방재공원, 방재놀이터, 방재캠핑장, 방재 키즈카페 등 주민참여 예산을 활용해 공간을 만들고 마을 재난 안전 인력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시민의 준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지역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활동이 일자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경제적 활동이나 일자리로 연결할 제도는 부족하다. 확실한 것은 기후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도시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설치하며,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시민들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남은 것은 이런 시민들의 역할이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일이다.

2021년은 파리협정이 본격 실행에 들어가는 해이자, 한국사회 탄소중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해이다. 국회에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법은 녹색성장기본법을 대체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탄소중립위원회가 곧 출범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 지자체도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임명 등 이행기반을 갖추게 된다. **그린 뉴딜은 정부와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제도를 만들 때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다.** 지역에서 녹색일job을 만들려면 무엇보다 지자체가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배정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시민들이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요구해야 하는 이유다.

참고문헌

- 이유진(2020). "사회적경제로 그린뉴딜하기", 『생협평론』 2020 가을(40호).
- 이유진(2021). "탄소중립시대를 여는 녹색 일자리", 함께일하는 재단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mkkeorg/22219572715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50+세대를 위한 그린 뉴딜 일자리 정책

그린 뉴딜 일자리는 무엇이고 그린 뉴딜 산업과 영역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린 뉴딜 일자리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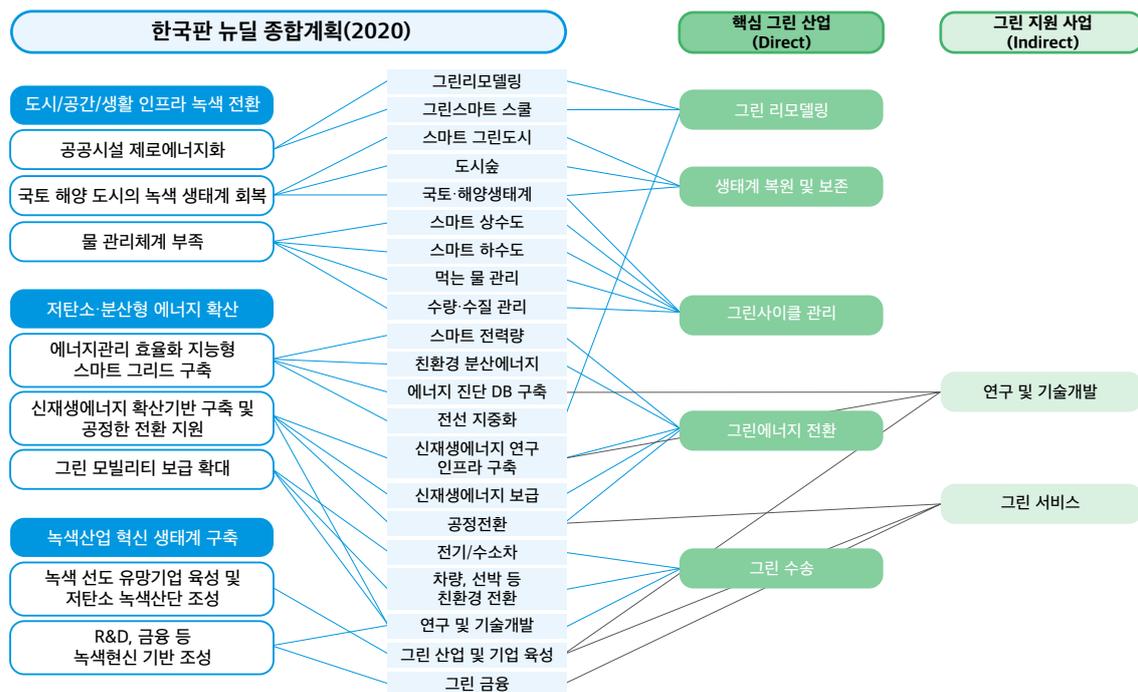
그린 뉴딜 일자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린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고, 환경 보호 및 개선, 탈탄소화 달성과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와 교육 및 직업 훈련으로 연계한 고용을 통한 일자리이다.

그린 뉴딜 산업

우선 그린 직·간접 일자리의 정의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관계부처 합동, 2020)의 그린 뉴딜 정책에서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린 뉴딜 산업을 구분하였다.

- ① 핵심 그린 산업: 종합계획에서 언급한 직접 일자리에 해당
- ② 그린지원산업: 종합계획에서 언급한 그린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간접 일자리에 해당
- ③ 이밖에 기타 그린 산업: 농업, 수산업 등

그린 뉴딜 산업 및 영역 구분



그린 뉴딜 영역

각 산업에 따른 대영역 및 중영역은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하였고, 각 영역이 포함하는 내용(범위)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 서울판 그린 뉴딜 정책(2020) 그리고 관련 법·제도 등을 기반으로 정의하였다.

산업별 대영역 및 중영역 종합

산업 구분	대영역	중영역
핵심 그린 산업	A. 그린 리모델링	A-1. 공공부문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A-2. 그린 건축물 신축
	B. 생태계 복원 및 보존	B-1. 국토 생태계 복원 및 보존
		B-2. 해양 생태계 복원 및 보존
	C. 그린사이클 관리	C-1. 상·하수도(오폐수) 관리
		C-2. 물 공급 관리
		C-3. 수량·수질(댐, 하천, 저수지 등) 관리
		C-4. 폐기물 처리 및 관리
	D. 그린에너지 전환	D-1. 태양광 에너지 전환
		D-2. 태양열 에너지 전환
		D-3. 지열 에너지 전환
		D-4. 풍력 에너지 전환
		D-5. 수력 에너지 전환
		D-6. 수열 에너지 전환
		D-7. 해양 에너지 전환
		D-8. 폐기물 에너지 전환
		D-9. 바이오 에너지 전환
		D-10. 석탄가스화/액화에너지 전환
		D-11. 연료전지 에너지 전환
D-12. 수소 에너지 전환		
D-13. 기타 에너지 전환		
E. 그린 수송	E-1. 그린카	
	E-2. 친환경 선박	
	E-3. 대중교통의 그린화	
그린 지원 산업	a. 연구 및 기술개발	a-1. 그린 산업 연구 개발
		a-2. 그린 기술 개발 및 인증
	b. 그린 서비스	b-1. 그린 금융 서비스
		b-2. 그린 경영 컨설팅 서비스
		b-3. 그린 법률 서비스
		b-4. 그린 관광 서비스
		b-5. 그린 뉴딜 산업 교육·훈련 서비스

50+세대를 위한 그린 뉴딜 일자리 정책 수립 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중앙 및 지방 정부는 50+세대가 그린 뉴딜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인터뷰¹를 통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1 '그린 뉴딜 산업 종사자와 주된 일자리(그린 뉴딜 산업 아닌 분야)에서 퇴직한 이후 그린 뉴딜 일자리로 재취업한 50+세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함.

그린 뉴딜 영역 및 재정적 지원 확대

그린 뉴딜 일자리 정책 활성화 및 그린 뉴딜 일자리 고용에서의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세금 감면, 고용지원금 제공 등 인센티브 도입을 비롯하여 투명한 그린 투자금 관리 등 모니터링 체계 개선 등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장기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은 신재생에너지에 집중되어 있어 그린 뉴딜 산업의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면서 시도별 특성을 반영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요구된다.

조직 규모별 활용

그린 뉴딜 정책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린 뉴딜 유망기업 100 프로젝트-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정책 수립이 요구되며, 중소기업, 협동조합, 협회의 역할을 세분화하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단체 및 협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50+세대의 고용가능성 및 적합 직무

그린 뉴딜 산업의 일자리 창출 전망은 비교적 긍정적이지만 50+세대의 채용에 대한 기업 내 인식 전환과 인사제도가 함께 변화해야 한다. 그린 뉴딜 산업에 종사했던 전공자는 리스킬링을 통해 재취업을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지만, 그린 뉴딜 산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비전공자의 경우 업스킬링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강을 통해 그린 지원 산업으로의 재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0+세대 당사자 및 50+세대를 맞이하는 조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50+세대에게는 환경 산업과 그린 뉴딜 일자리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과 이론과 실재를 함께 다루는 PBL(Project Based Learning)과 같은 현장 중심의 훈련이 필요하다. 50+세대 뿐만 아니라 이들을 채용하는 고용주에게도 인식 전환 교육이 요구되며,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그린 뉴딜 산업의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교육에 대한 니즈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가, 지역 및 재단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가?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그린 뉴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법체계 정비, 유사 위원회 구조조정, 참여주체 선정과 분야별 이행 로드맵 제시의 추진체계를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등 기존 법령과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그린뉴딜기본법, 기후변화대응기본법 등 그린 뉴딜 관련 법안을 신설하여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 추진 및 그린 뉴딜 일자리 창출에 기반이 되어야 한다.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의 구조 조정을 통해 전략적 컨트롤 타워를 수립해야 하고, 공공 및 민간 기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이르면 시민참여형/지역분산형 협동조합 및 협회 등 다양한 참여 주체가 함께하여 그린 뉴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판 그린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시의 정책적 방향과 핵심가치를 그린 뉴딜의 기초와 일관되면서도 도시 특성을 반영한 그린 뉴딜 일자리 창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미국 뉴욕시가 OneNYC 2015²를 기반으로 OneNYC 2050³을 수립하고 80×50법⁴ 등 관련 법 제정을 실시한 것처럼 서울시는 앞서 언급하였던 기존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거나 신설하여 주거, 첨단 인프라, 경제, 지역사회 등 각 분야에서 그린 뉴딜 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포용적 성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 보다 먼저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다양한 국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에서 가능한 그린 인프라 개선 사업, 구직자와 사회적 약자 및 50+세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 역량 훈련 사업, 그린 일자리 지원 사업, 산업별 파트너십 촉진 및 훈련지원 사업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공공사업을 일으켜 관철은 그린 뉴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50+세대가 진입 가능한 그린 뉴딜 산업에서의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직종, 자연환경해설사, 녹색생활지도사, 사회환경지도사, 산림교육전문가 등 그린 뉴딜 일자리가 존재하지만 기업에서 저임금으로 고용하거나 기간제 혹은 일용직 일자리인 경우가 대다수인데 지속가능한 고용 환경 조건을 갖춘 관철은 일자리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태양열 관련 시공 현장에서 안전관리 감독관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연속성 있는 일자리로 발전시키거나, 기업의 에너지 진단을 의무화하여 에너지 컨설턴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그린 뉴딜 일자리로 진입하기 전 재단에서 제공하는 ‘도시 해설가 과정, 녹색일자리 탐색(숲·산림), 녹색일자리 성장(숲교육전문가), 에너지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그린 뉴딜 산업에 대한 관심 및 기본 소양을 기를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일·활동을 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한다.**

또한 재단은 그린 뉴딜 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자격증 취득 사전 단계의 교육과정,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관 연계, 자격증 취득 이후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 정보 제공, 그린 뉴딜 50+인턴십 제공, 협회 및 협동조합 창립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활동 경험을 유도함으로써 더 많은 50+세대가 그린 뉴딜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 서울시50플러스재단(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린 뉴딜 50+일자리 정책 연구의 일부내용 정리

- 2 OneNYC 2050의 전신이며 뉴욕시장 빌 드 블라지오(Bill de Blasio)가 뉴욕시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린 뉴딜을 제시하고 추진한 정책이다. 'Pre-K for all(가계 소득 관계없이 어린이집 무상 교육)', 'Vision Zero(교통수단으로부터의 안전, 건강 등을 지키고자 하는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의 종합 형태이다.
- 3 뉴욕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2050년까지 각 분야의 성장, 지속가능성 및 회복탄력성을 증진시켜 강하고 공정한 도시(Strong and Fair City)가 되기 위해 8개의 전략목표, 30개의 이니셔티브로 구성된 그린 뉴딜 정책이다.
- 4 지난 2014년, 뉴욕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Local Law 66'를 제정하였다. 2050년까지 80%의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의미로 '80×50 Law'라고도 불린다. 이 법은 그린 뉴딜 정책 추진의 기원이 되는 매우 상징적인 법이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20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 뉴스핌(2020.6.26.). “환경부-중기부, 100대 그린 중소기업에 3년간 30억 지원”,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626000271>
- 서울시(2020.10.12.). 내 손안에 서울 “서울시 ‘그린뉴딜’로 탄소배출 제로 도시 실현”,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288254>
- 서울시50플러스재단(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린 뉴딜 50+일자리 정책 연구」.

미국 메릴랜드 부양 지원 서비스

“세상에는 단 4가지 타입의 사람들만이 존재한다.

부양을 했던 사람,
현재 부양 중인 사람,
향후에 부양을 제공하게 될 사람,
그리고 부양을 받게 될 사람”
-로잘린 카터-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 부양의 이슈는 날로 커지고 있다. 부양자(Caregiver)란 노인이나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 친구 및 이웃 등을 의미한다. 특히, 배우자, 성인 자녀, 기타 일가친척을 포함하는 가족 부양자는 노인들에게 비공식적 무급 부양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이들은 옷을 갈아입고, 식사하는 것, 이동하는 것 등 돌봄 수혜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약을 복용하거나 의료 장비를 사용하는 일, 상처를 치료하는 일 등과 같이 보다 복잡한 임무도 수행한다. 또한, 돌봄 수혜자의 재정 관리 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도움을 주게 된다. 한편, 노인 부양이 더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부양자의 대다수 역시 근미래에 돌봄이 필요한 (예비)노년층이라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현재 성인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 또는 병환을 앓고 있어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성인이나 어린이를 돌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미국의 가족 부양자 지원 프로그램은 가족 부양자들에게 돌봄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지는 것을 예방하는 한편, 부양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해결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부양 지원 서비스 제공은 부양자들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더 오랫동안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결과적으로, 부양 지원 서비스를 통해 돌봄을 받는 수혜자들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기관 케어(예: Nursing Home)의 필요성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장점을 가진다. 본 원고에서는 미국의 전반적인 노인 부양 관련 정책과 서비스를 메릴랜드 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국내 관련 정책 및 지원서비스 발전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전미 가족 부양자 지원 프로그램(The National Caregiver Support Program)

미국 보건복지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와 인구노화행정부(The Administration on Aging)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미 가족 부양자 지원 프로그램은 가정 내

에서 노인을 돌보는 가족 부양자 및 비공식 부양자를 지원하기 위해 각 주 및 미국령 영토에 관련 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노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Older Americans Act)에 의해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 연간 1,700억 원(\$150,586,000) 정도가 지원금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2020년에는 2,000억 원(\$186,900,000)이 넘는 규모로 대폭 증가되었다.

기금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주(State) 및 지역사회에 따라 상이하나, 많은 주정부들이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각 주의 상황에 맞게 수용하고 혁신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 프로그램의 개시 이래 약 70만 명의 가족 부양자가 관련 혜택을 수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중에서 10만 명의 부양자들은 부양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거나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관련 상담이나 교육을 받았다. 또한 약 60만 명의 부양자들은 6백만 시간에 달하는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주요 5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다.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각각의 가족 상황에 맞는 서비스 수혜에 대한 도움
	상담, 지지그룹의 형성 및 부양 관련 교육 제공
	부양자 휴식제공(Respite care)
	기타 부가 서비스(거주환경 개선, 집안일, 영양관련 지원, 교통 지원, 부양 관련 기술 장치의 보조, 의료 장비 및 서비스 제공 등)

이러한 부양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양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6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18세 이상의 가족 구성원 혹은 기타 비공식 부양자		모든 종류의 알츠하이머 치매 및 관련 질환을 겪는 전연령대의 환자를 돌보는 가족 구성원 혹은 기타 비공식 부양자
	18세 이하의 어린이를 돌보는 조부모 혹은 55세 이상의 친인척		18세 이상 59세 이하의 장애를 가진 성인을 돌보는 조부모 혹은 55세 이상의 친인척

메릴랜드 가족 부양자 지원 프로그램

메릴랜드 주는 노인 인구의 지역 거주를 도모하기 위한 전미 가족 부양자 지원 프로그램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주정부 산하의 인구노화정책부(Department of Aging)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 부양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 목적은 부양 수혜자로서의 노인은 물론 부양 제공자로서의 노인 혹은 성인 가족 부양자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인구와 그 가족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메릴랜드 주에서는 인구노화정책부 산하에 카운티(County) 별로 총 19개의 권역별 에이징 에이전시(Area Agencies on Aging)를 설치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메릴랜드 가족 부양자 지원 프로그램의 예는 다음과 같다.

휴식 지원 프로그램

부양자들이 돌봄으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으로부터 일시적인 휴식을 갖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이다. 메릴랜드 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uman Resources)에 의해 운영되고 있

으며, 앞서 언급된 전미 가족 부양자 지원 프로그램 기금에 의한 보조금 형태로 제공된다. 휴식 지원 프로그램 과정은 각 관리 기관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부양자가 지역의 에이징 에이전시에 신청하면 수혜자의 필요를 평가하고, 가족 및 의료진 상담, 가정 방문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보조금은 부양자가 휴식을 위해 부양 보조자를 고용하거나 부양 역할과 관련된 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양자 혹은 부양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된다.

케어기버 서비스 콕스(Caregiver Service Corps)

메릴랜드 인구노화정책부에서는 COVID-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노인들이 공백 없이 가정 내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0년 5월 케어기버 서비스 콕스를 도입하였다. 이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부양자가 건강상태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가 격리로 인하여 부양하던 노인을 돌볼 수 없는 경우 긴급 백업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거주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에는 복약 모니터링, 가정내에서 필요한 이동 도움, 기본 음식 준비, 목욕 및 개인 위생관련 보조, 노인들이 가족과 화상채팅을 하거나 원격의료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신기술 교육 등이 포함된다. 궁극적으로, 이 서비스는 가정 내에서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노인들이 병원시설로 옮겨지는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가족 부양 관련 교육 및 워크숍

메릴랜드 주에서는 지역 커뮤니티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부양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일례로, 메릴랜드의 최대 도시인 볼티모어 보건부에서는 매달 가족 부양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건강 교육 관련 전문가가 매주 2~3시간의 세션을 지도하며 클래스당 약 10~12명의 참가자가 교육을 받는다. 이 교육의 목적은 부양자들에게 호스피스 케어, 휴식, 스트레스 관리는 물론 영양사를 고용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하는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교육함으로써 부양자의 돌봄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있다. 또한, 이 교육 과정에서는 식단 관리, 낙상, 감염 관리, 약품 관리, 화재 관련 안전, 노인 학대 및 방치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돌봄을 받는 노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에 역점을 둔다. 이와 함께, 지역 정부 및 대학 연구기관, 병원들이 협력하여 부양 수혜자 및 부양자 모두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 각종 워크숍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출처: <https://211md.orgcaregivers>

노인 안부 체크 전화 서비스

메릴랜드는 미국 내에서 노인 거주자의 안부를 파악하기 위한 무료 전화체크 서비스를 시작한 첫 번째 주이다. 케어기버 서비스 콕스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자동적으로 ‘노인 전화 체크 서비스’에 등록되며, 가족 부양자, 이웃, 친구 등 누구나 메릴랜드 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들은 정기적인 전화통화를 통해 안부를 체크 받고, 건강관련 정보를 안내받는다. 만약, 노인과 전화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담당자가 배치되어 가정 방문 등 더욱 면밀하게 노인의 상황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출처: <https://aging.maryland.gov/Pages/senior-call-check.aspx>

노인인구의 증가는 부양 인구의 증가를 예고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일이라 하더라도, 부양활동은 부양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연구에 따르면, 부양활동은 부양자로 하여금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면 등 다방면에서 큰 희생을 야기한다. 따라서, 부양자 역시 신체 및 정신 건강이 악화되거나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다. 부양 부담으로 인해 부양자가 고통을 겪는다면 이는 돌봄이 필요한 ‘또 다른 환자’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인 부양의 이슈를 단순히 개별 가족의 문제로 여기기 보다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의 사회적 변화로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부양과 관련된 제도적 지원장치 마련은 매우 시급해 보인다. 다가올 미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부양 관련 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 이 원고는 미국 연방 정부 및 메릴랜드 주정부, 볼티모어 시티 정부의 정책 홍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참고문헌

- <https://211md.org/caregivers>
- <https://acl.gov/programs/support-caregivers/national-family-caregiver-support-program>
- <https://aging.maryland.gov/Pages/National-Family-Caregiver-Support.aspx>
- <https://aging.ny.gov/national-family-caregiver-support-program>
- <https://health.baltimorecity.gov/family-caregivers-program>
- <https://health.baltimorecity.gov/family-caregiver-training-class>
- https://jhjhm.zoom.us/webinar/register/WN_tr348XUoTOqgRjK7sf2oQ
- <https://www.baltimorecountymd.gov/departments/aging/caregivers/index.html>
- <https://www.freedomcareny.com/posts/national-family-caregiver-support-program>
- <https://www.socialworkers.org/Practice/Aging/Aging-News/National-Family-Caregiver-Support-Program>

중국, 60대 이상 고령층 빈곤화 막기 위해 주력

빈 임대주택, 60대 이상 고령자에 무상 제공

중국이 60대 이상 고령층의 빈곤화를 막기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전역에 소재한 빈 임대주택을 고령층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고, 근로자의 정년 연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 정책을 공개해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중화인민공화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와 중화인민공화국민정부(中华人民共和国民政部),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员会) 등 3개 부처는 최근 공실률이 높은 국가 소유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거주지가 특정되지 않은 고령층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공개했다.

2021년 2월 1일 중신왕(中新网) 등 중국 유력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 정책은 일명 ‘인구 고령화 대응을 위한 중점 연계도시 체제 구축 방안 통지문(建立积极应对人口老龄化重点联系城市机制的通知, 이하 통지문)¹’의 일환으로 올해 들어 중국 당국이 고령 인구를 겨냥해 시행하는 첫 도시체계구축 방안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모아졌다. 이에 따라, 중국 각 지역에서는 빠르면 오는 2022년까지 장기간 비어 있었던 공공임대주택(公租房)과 국유기업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무상 또는 저가의 양로 입주 시설을 개설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양로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업계의 전방위적 지원 방식을 혁신하고, 양로서비스기구에 대한 용자 채널 다각화, 대출 담보물 범위 확대 등 세부 내용이 추가 공개됐다.

이를 토대로 중국 당국은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비하여 지역 사회 발전 및 경제 혁신 방안 등을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 고령화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혁신 모델 및 실용 정책을 등을 모색, 빠른 시행력을 국내외에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중국 산시성(陕西省) 상난현(商南县)에 건설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모습.
출처: 부동산 전문지, 중귀팡디찬바오(中国房地产报).

1 <关于建立积极应对人口老龄化重点联系城市机制的通知>,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ndrc.gov.cn), 2021.2.1

산시성(陕西省) 상난현(商南县)에 건설된 총 4만 7,914평방미터의 부지 위에 완공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지난 2011년 4월 완공된 이후 줄곧 공실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계획대로라면 6,943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 주거 단지이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이미 분양, 판매가 완료된 239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시설에 대해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고령자 입주를 목적으로 한 공공 임대주택 시설 증축 및 건립을 위한 토지 이용 부문에서 중국 당국은 양로 시설을 우선 사용하도록 각 지역 정부에게 토지 사용권에 대한 사용 지침을 내린 상태다. 다만 이번 방침은 기존의 빈 임대주택과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노인 전용 요양 시설로 변경하는 과정 중 현행 법령 내에서 시공 지침을 준수하는 등 각 지역 현지 실태에 따라 합법적인 기준 하에서 운영될 것이다. 이와 함께, 양로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각 지역별, 연령별, 환경 등 구체적인 기준 하에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고령자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의 4년제 대학교 및 2~3년제 전문대학 내에서의 노인 재활, 간호 등 노인 서비스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규모를 확대할 것이다. 노인 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은 국가가 나서서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양로 산업에 근무 중인 이 분야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추가 내용도 공개했다. 단,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21년 3월 15일 현재 까지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국가행정학원(国家行政学院)의 주리자(竹立家) 공공관리학 교수는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 기자와의 대담에서 “현재 중국의 고령화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사회 현상이다. 매년 인구의 상당수가 급격하게 고령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령 인구가 가진 경제적 능력은 미래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이 인구 고령화로 받게 될 경제·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사회 내 문제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부단한 혁신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건설된 대규모 임대주택단지의 내외부 모습
출처: 부동산 전문지, 중귀팡디찬바오(中国房地产报).

이번에 공개된 고령자를 겨냥한 대규모 무상 주택 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에는 ‘고령 인구의 거주지 등 주택 문제는 사회 공동체가 조화롭게 협력해 지원해야 할 것’과, ‘각 가정에서 양로의 기능을 우선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이와 관련하여, 각 성(省) 발전개혁위원회는 본 방안의 요구에 따라 현지 인구의 고령화 발전 현황과 추세에 맞추어, 개혁 의지가 강하고 지역 발전 가능성이 크며 지역적인 특색이 비교적 선명한 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방침도 공개했다.

특히 각 성의 발전개혁위원회는 지역별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 또는 저가의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정부에 대해 사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각 지역 정부는 지역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작성된 사업안을 제출하고, 해당 사업안에는 주로 고령층 지원 내역과 관련한 지역 사회 개혁의 의지와 서비스 혁신, 지원 방안, 노후화된 환경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단, 각 지역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자율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안을 보고 받은 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지역별로 상이한 사업안에 대한 도시체계 구축과 관련한 업무 목표, 내용 등 구체적인 업무 방안 마련을 지도해야 한다. 또, 성급 인민정부의 심사 동의를 받은 후 민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협업,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노인 친화적인 도시를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확정된 지역별 무상 또는 저가의 공동 임대주택 지원 방안은 현(縣)급 이상의 행정 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반면, 고령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양로 봉사 능력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 양로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적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역 사회 공동체 상호간의 핵심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각 지역 사회가 가진 고령 인구에 대한 지원 서비스 책임을 우선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중국 당국의 고령 인구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방침이 외부에 선전, 홍보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실상은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령자 거주지의 현대화 사업과 이를 통한 각 가정의 가진 고령 인구에 대한 양로 기능성과 지역 사회의 부양 역할 분담 등이 골자로 했다는 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때문에 향후 각 지역 정부는 고령 인구의 의료서비스 영역을 가정과 지역 사회, 국가 기관 등 3개 분야에 분할, 각자가 맡은 역할 분담을 위한 빠른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중국 당국이 임대 주택의 무상 제공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은 현재 중국 내 인구 고령화 속도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19년 12월 기준, 중국 내 60세 이상 인구는 이미 2억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중국 민정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 년도의 60세 이상 고령 인구는 무려 2억 5,388만 명을 초과했다. 이는 전체 중국 인구 중 약 18.1%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이 가운데 65세 이상의 인구는 1억 7,603만 명으로, 같은 시기 중국 전체 인구 중 무려 12.6%의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의 인구 고령화 문제는 초고령화, 고령인구 빈곤화, 부양능력 없는 노인 및 독거노인의 증가 등을 특징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생산가능인구의 상대적 감소와 노인부양비율을 증가시켜 기존의 성장동력이었던 ‘인구 보너스’² 소실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전국고령화정책연구부(全国老龄办政策研究部) 리즈룽(李志宏) 주임은 “중국의 고령화 현상은

2 ‘인구보너스’는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이 높고, 고령 인구 비율이 낮은 인구구조로 인해 경제 성장이 촉진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인구 구조는 사회적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저축과 투자를 늘려 국가 경제의 고성장 국면 진입에 기여한다는 평가다.

정부 주도의 산아제한정책이라는 특수성을 안고 있다. 고령화 현상은 현재로는 불가피한 사회 문제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가 급격하게 늙어가면서 고령의 인구가 마주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노후 비용을 감축하는 체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 국가행정학원 주리자 교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곧 경제 수요와 구매 잠재력 있는 인구의 증가를 의미한다. 양로 수요 부담 완화를 위해 체제 혁신 등 환경의 최적화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고령화 현상, 정년 연장 구체적 논의 단계

고령자 급증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계획은 비단 주택 무상 공급 정책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근로자들의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매우 구체적인 단계까지 이어오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최근 노인 인구가 2025년까지 3억 명을 넘어서며 고령화 현상이 급격하게 시행될 것으로 전망, 근로자 정년 연장에 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의 민간 싱크탱크인恒大연구원(恒大研究院)은 지난해 10월 공개한 인구보고서에서 2050년 이후의 급격한 인구 감소를 전망하며 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저하 등을 막기 위해 정년 연장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1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中国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이하 인사부) 관계자는 현지 언론을 통해 “성별과 직종에 따라 50~60세로 되어 있는 퇴직 연령과 관련해 개혁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각국이 고령화에 대처하는 보편적 방법이다.”라고 하며,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기존의 정년과 관련한 연장안이 골자로 된 일명 ‘퇴직개혁안’을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³

인사부는 최근 개최된 국무원 브리핑을 통해 “퇴직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과 경험을 고려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현재 중국의 퇴직 연령은 일반 여성 회사원 50세, 임원급 여성 직장인 55세, 남성 회사원 60세 등 직급과 남녀에 따라 차등 실시되고 있다. 이는 지난 1951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조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때문에 이미 오래 전부터 고령 사회에 접어든 중국에서 1인당 수명과 인구 구조, 노동력의 질적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인 새 규정 마련의 시급성이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현행 법률이 제정될 당시 중국인의 기대 수명은 45세 이하였다. 반면 지난 2019년 기준 중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77.3세로 집계되었다. 이 시기 중국 여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80.3세, 남성은 74.8세로 여성의 기대 수명이 남성보다 5.5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나, 기대 수명이 더 긴 여성의 정년이 남성보다 짧은 것은 현실성 없는 조례의 대표적 사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지난 20여년 동안 청소년 수가 급격하게 감소,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때문에 현행 정년 기준을 고수할시,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보장 기금 수입 적자와 지출 압박으로 인한 파산 상태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향후 공개될 새로운 정년 연장 법규는 ‘자발성’ 및 ‘탄력성’ 등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된 상태다.

3 이에 앞서 지난 2001년 5월 14일 리커창 총리는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구현하고, 인구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적당한 출산 수준을 달성하고, 법정 은퇴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기해야 한다고 공식 발언한 바 있다.

양로산업에 디지털 기술 접목 추진

이와 함께, 이번 정책이 공개되자 향후 지역사회와 가정, 국가 기관 등 3개 분야가 연계한 노후 서비스 업종의 기업을 대규모로 양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특히 일명 ‘미부선로’(未富先老, 부유해지기 전에 늙어가는 고령화 문제) 현상에 집중, 인구 고령화 가속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족한 사회제도 문제를 가장 먼저 혁신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은행 등 금융 업계를 활용한 양로 산업 발전 지원 방식을 혁신, 양로 서비스 업종에 다양한 대출 채널을 확대키로 했다. 이 분야 기업이라면 대출의 담보물 범위가 크게 확장되는 등의 경제적 지원 방침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 당국은 2월 현재 이 분야 중사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넷망을 활용한 ‘인터넷+양로서비스’ 정책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대형 인터넷 기업의 양로 서비스 및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과 우수한 양로 서비스 업체에 대한 인터넷 플랫폼 구축 환경 지원 등이 빠르게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 중난재경정법대학 디지털경제연구원 판허린(潘和林) 박사는 “양로라는 산업 체인에 디지털과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라면서 “여기에 더해 빅데이터 기술을 충분히 활용, 전체 노인 가정 방문 서비스를 포함한 양로 분야 일반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로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기술과 관련한 현황은 양회(兩會)에서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 전국인민대표(全國人大代表)이자 커따션페이(科大訊飛, 스마트 의료 서비스 관련 음성인식 서비스 개발 업체) 창업자 리우칭펑(劉慶峰) 최고 경영자는 “지능형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이 노인의 요구에 맞게 조정되고 있다”면서 “스마트 도구가 노인들의 일상 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제14차 5개년 기간 동안 노인들의 디지털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애플리케이션 등 복잡한 응용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고령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번없이 12345번의 정부 핫라인 유선 전화 서비스를 통해 고령자 누구나 해당 서비스 이용 문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노인들 누구나 공공 서비스 및 사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현재 중국 인구 구조는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인구 고령화가 가져올 각종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은 관련 지원 정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분위기다. 이번 정책 역시 그 목적이 중국 국내 및 국제 사회에 중국고령사업의 전개상황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정부가 반드시 인구고령화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고령화 문제, 노인의 합법적 권익 보호, 고령사업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정책의 현실

화와 통일성 있는 지역 배분 등이 순차적으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노인의 합법권익을 보장하고 고령사업을 총괄하는 전문기구 및 관련 정책의 입법화 등 후속 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상 또는 저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외에도 중국 고령 인구의 상당수가 주로 노년기에 양로금을 받아 기본적인 생활을 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정년 연장 논의 현실화는 인구 고령화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전 사회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사회적 요구에 호응해야 하며, 입법 지원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덧붙여, 과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법률을 완비하며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조치를 잘 이행해 고령 인구의 이익이 법적 타당성을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고령화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참고문헌

- 关于建立积极应对人口老龄化重点联系城市机制的通知, 发改办社会, 37号, 2021.02.01
- 三部门为养老服务支招: 支持空置公租房等无偿或低偿用于养老, 拓宽机构融资渠道, 每日经济新, 2021.02.01
- 董澄溪、邓志超: 退休制度改革应以自愿为原则, 灵活推进, 界面新闻, 2021.02.28
- 延迟退休实施原则公布: 小步调整 弹性实施 不搞一刀切, 央广网, 2021.03.14

5 0 +
리포트
2021

2021년 02호 Volume 26

02

Issue

50+ 1인가구와
돌봄에 관한 고찰

이슈 PICK 66	50+세대 1인가구에 대한 돌봄 필요성과 방향 송민혜
이슈 PICK 70	중장년 남성 1인가구와 상담 김현수
이슈 PICK 74	50+세대의 돌봄, 돌봄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박세경
이슈 PICK 78	커뮤니티케어와 50+세대 안기덕
글로벌 50+ 81	미국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전문직 간 교육(Interprofessional Education, IPE) 박민경
글로벌 50+ 86	스페인 노인을 위한 대학, 주립 노인대학 프로그램협회 아에품(AEPUM) 장혜진

50+세대 1인가구에 대한 돌봄 필요성과 방향¹

중장년 1인가구 정책은 왜 필요한가

1인가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사회적 관계 단절과 고립 등에 노출돼 있는 1인가구의 고독사·고립사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변화된 가구구조를 반영한 소득·돌봄·주거·안전·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종합적인 지원안이 제시되었다.

1인가구의 특징은 생애주기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생애주기 상 중장년 시기는 청년 시기와 노년 시기에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관계 단절, 건강상 문제 등을 모두 복합적으로 겪게 된다. 즉, 중장년 1인가구는 비혼주의의 확산과 이혼 및 '기러기 부부'의 증가 등으로 외로움에 방치되거나 퇴직 후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로 인한 고립, 연금수급 이전까지 경제적 공백기가 길어질 경우 빈곤과 고독사 등의 위협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1인가구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외로움과 고립감뿐만 아니라 퇴직 후 직면하게 되는 경제적 불안감, 온전히 경제생활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의 불충분한 노후준비, 65세 이전의 연금수급 어려움과 복지혜택에 대한 소외 등은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장년 1인가구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건강 문제가 생계 문제와 사회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청년에서 중장년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1인가구의 경우는 생계를 나눠서 책임지거나 아플 때 돌봐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부재로 인해 건강 문제가 생계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본인의 건강상태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과 고독사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중장년 1인가구는 특히 건강과 고독사 문제에 대해 관심이 큰 집단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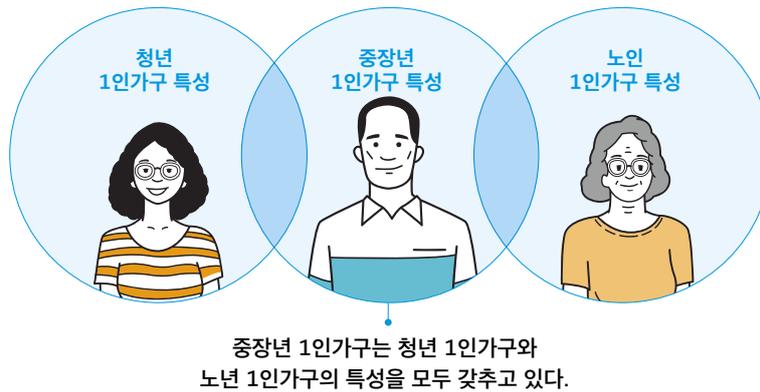
1인가구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지점은 무엇인가

이런 가운데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국가 및 서울시 차원의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중장년층의 고독사

¹ 서울시 중장년 1인가구 실태 및 지원정책(2020)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비율이 전 연령 대비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만 지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외로움과 우울감 등의 해소를 위한 상담사업이나 커뮤니티 활동 등의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청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은 주거·소득·돌봄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소득·돌봄 분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의 경우는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한 지원만 언급되어 있으며, 상담서비스는 정신건강상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거 분야에서도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표방하고 있으나 청년특화주택과 고령맞춤형 임대 주택만 언급돼 있어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지원안은 구체적으로 찾아보기가 어렵다.



중장년 1인가구의 특징

앞서 언급했듯이 중장년 1인가구는 청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의 특성을 모두 가진 집단이다. 생애주기 상 청년과 노년이 경험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모두 겪는다. 그러나 ‘생애주기별 차별화된 지원’을 표방한 지금의 1인가구 지원정책으로는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힘들다. 특히 건강 문제가 생계 문제 및 고독사 문제와 직결될 수 밖에 없는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돌봄 분야의 지원이 불충분해 이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중장년 1인가구에게 돌봄 정책은 왜 필요한 것인가

1인가구 특성상 돌봄에 대한 수요는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특히 중장년 1인가구에게 돌봄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중장년층은 생애주기 상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건강상의 문제와 생계 문제가 연계돼 있고, 고독사에 대해서도 대비해야하는 나이다.

중장년 1인가구는 아플 때 돌봐줄 사람 등이 마땅치 않고 친지나 친구 등에게 의지하는 것조차도

어려워 한다. 이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고독사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에 대한 돌봄 문제를 항상 고민하고 있다. 몸이 아플 경우 의료비나 생계비 등 경제적 문제에 대한 고민도 피할 수 없으므로 몸이 아플 때, 생계가 곤란할 때, 생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울하고 고독한 일상에서 잠깐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이렇듯 중장년 1인가구는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가족과 친구 등에게 폐를 끼치거나 도움을 청하는 방법은 선호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즉,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거나 요양원·장기기증 등을 통해 고독사 문제에 대비하고 아플 때 조차도 혼자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보호자의 동의를 필요할 때 보호자 역할을 해줄 가족 또는 친지 등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그동안 왕래가 없어 연락이 닿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다. 또한 1인가구를 위한 돌봄 분야 지원정책 중 병원동행 서비스나 상호돌봄, 간병서비스, 긴급생활지원 등을 중장년 1인가구도 필요 시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관련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돌봄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제안돼야 하는가



지원가능한 돌봄서비스 발굴과 대상 확대



고독사와 고립사를 예방할 수 있는 정서적 지원안 활용



정부 지원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돌봄 정책 방향성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돌봄 정책은 ▲지원가능한 돌봄서비스 발굴과 대상 확대 ▲고독사와 고립사를 예방할 수 있는 정서적 지원안 활용 ▲정부 지원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등에 초점을 맞춰 제시되어야 한다.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에 포함된 돌봄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 등은 장기요양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중장년 1인가구는 장기요양수급자는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고독사에 처할 수 있는 연령대라 할 수 있다. 또 장기요양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에 준하는 지병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24시간 순회 정도는 아니지만 중장년 1인가구들도 돌봄 대상으로 확대해 긴급상황 시 비상연락망 등을 지원하거나 주 1회 혹은 한 달에 1~2회라도 건강에 문제를 겪고 있는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순회돌봄서비스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전화안부 서비스를 활용한 정서적 안정 등의 지원도 중요하다. 해외사례에서도 전화안부 서비스 등은 고립과 고독에 대한 지원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중장년 1인가구 중 친구나 친지 등 특정한 누군가와 교류가 없는 경우는 본인의 안부에 대한 상태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다.

중장년 1인가구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는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줄 누군가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활용 가능한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돌봄지원과 병원동행서비스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잘 알지 못해 돌봄이 필요할 때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우울감과 고립감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필요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장년 1인가구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사회적 관계 단절 문제는 단순히 상담과 커뮤니티 활동 지원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아울러 1인가구 특성상 돌봄을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돌봄의 부재는 중장년 1인가구에게 생계 문제나 고독사 문제를 가중시키는 가장 주된 요인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있어서 중장년 1인가구에 적합한 돌봄 정책안을 마련해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장년 남성 1인가구와 상담



중장년 남성은 중년 여성보다 더 우울하고 외롭다

중장년 남성의 우울증 유병률은 중장년 여성의 우울증 유병률보다 높다. 우리나라 주요 우울장애에 관한 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요 우울장애 평생 유병률은 여성(9.1%)이 남성(4.3%)에 비해 2배 정도 높다. 반면 연령과 성별을 고려한 경우에는 중장년 남성의 우울 수준이 14.33으로 중년 여성의 11.78보다 높은 결과를 보인다.¹ 이 때문에 중장년기 남성의 우울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50대 남성 1인가구는 사회 안에서 오랜 시간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50대 자살자의 수는 10년 이상 인구 구성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왔고, 고독사의 수도 50대가 가장 많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혼자였다.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50대 1인가구는 이혼, 실직, 퇴직, 빚, 가족과의 불화, 외로움, 우울, 질병, 중독 등으로 인한 삶의 위기와 맞닿아 있다. 그리고 이 열거한 요인들이 자살이나 고독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요인들이고, 그래서 중장년 남성 중에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상담이 더 간절하고 연대가 필요하지만, 가장 상담실을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1 김옥수, 김애정, 김선화, 백성희, 양경미(2003). 청·중년층의 피로, 우울, 수면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과학회, 33(5), 618-624

중장년 남성들은 왜 상담받지 않을까?

1) 중장년 남성들의 상담 회피 경향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다수의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장년 남성은 ①우울을 나약함으로 생각해서 잘 드러내지 않고 ②우울감이라는 감정을 잘 자각하지 못하며 ③우울함이 느껴진다고 해도 그 해결방법을 행동으로 앞세우다 보니 중장년 남성은 상담에 근접하기가 어렵다. 더불어 ④지금 막 부모의 노후나 자녀의 대학입학·결혼 등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압박으로 우울을 호소할 수 없는 처지이기도 하다.²

2) 중장년 남성을 위한 상담 적합성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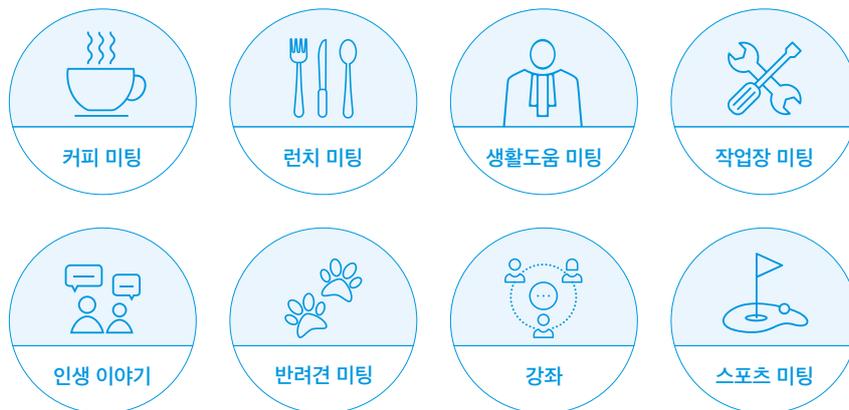
반면 많은 중장년 남성들은 ①젊은 상담원들과의 상담이 별 도움이 되지 않고 ②현실적 문제가 워낙 큰데, 이런 문제는 외면하고 마음의 문제만 다루는 것에 대한 실망이 크며 ③실제로 개별적으로 찾아가 자기 마음의 문을 열어서 대화하기란 너무 힘들다고 한다. 그러므로 전통적 형태의 1대1 상담방식인 현 접근법에는 자신들이 호의를 표하기가 어렵다고 한다.³

중장년 남성의 상담,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

중장년 남성이 우울과 자살 등 부정적 인생경험에서 벗어나도록 도우려면 우선 그들과 만나야 한다. 가벼운 개인적·집단적 만남부터 진지하고 심층적인 만남과 상담에 이르기까지, 가능하고 유용한 만남이 다양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1대1 상담을 고집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없다.

1) 만남의 다층화 및 활동의 다양화⁴

외국에서 시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점검해 본 결과 중장년 남성을 만나는 상담 서비스는 아주 다층화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안미경(2018). 50대 중년남성의 우울 경험에 대한 탐구. 한국 질적탐구, 4(3), 165-199

3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JRY2VUK>

4 김현수(2021). 서울시 중장년 남성 자살예방 토론회 자료

- 커피 미팅 커피 마시고 가면 되고, 커피를 마시면서 정보를 나누는 정도의 미팅
- 런치 미팅 음식을 제공하거나 혹은 준비해 오거나 해서 중장년 남성들과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어울리는 미팅
- 스포츠 미팅 주 단위로 모여서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미팅
- 강좌 함께 강의를 듣고 토론할 수 있는 만남
- 인생 이야기 함께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미팅
- 반려견 미팅 본인이 함께 지내는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 함께하는 미팅
- 생활도움 미팅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필요한 생활상의 문제를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미팅
- 작업장 미팅 남성들이 공구나 도구를 사용해 목공이나 철공 혹은 다른 방식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미팅

1대1 상담 중심의 사업에서 다양한 층위의 프로그램으로 변신할 필요가 있고, 집단을 이루어 구성해 주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 면담보다는 집단 면담, 상담가만큼이나 도움이 되는 형님 멘토가 있을 수 있다.

개인 면담의 부담을 피하고 싶어 하는 중장년 남성은 자신들의 또래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집단 면담 안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집단 면담이나 교육에 기반한 집단토의에서는 활동을 활발히 하기도 한다. 그리고 상담가들에 의해 주도되기보다는 멘토 혹은 또래들의 튜터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다.

2) 중장년 남성 특성 인지적 접근이 중요하다!

‘늙은 남성을 어디 갔다 쓰느냐’라거나 ‘노후준비가 안 된, 능력 없는 남자는 쓸모가 없다’라는 등의 생각을 스스로 하는 경우도 많다. 중장년 남성의 심리는 어둡고 주름지고 기운이 없는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

많은 경우 ①성적인 능력을 포함한 건강한 남성다움을 잃었다고 지나치게 생각하고 ②가정이나 사회에서 자신의 기능이나 역할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며 ③중장년 남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고 자신의 롤모델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중년 남성의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된 ‘자기상’이나 중장년 남성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모델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므로 위축되고 예민하면서 분노발작을 간간히 일으키는 중장년 남성에게 대한 특성을 잘 알고 부드럽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중장년 남성에 대해서는 ‘성 역할’ 인지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3) 중장년 남성 그들만의 공간이 절실하다.⁵

영국에서 진행되는 Men’s Shed(남성들의 작업장)는 남성들이 함께 편안히 모여서 차를 마시고 목

5 Mental Health Forum In Ireland (2018). Middle-aged men and suicide in ireland (pdf)

공도 하고, 기타 다른 작업들과 함께 사회적 기여나 참여를 할 수 있는 봉사활동과도 연계가 되는 곳이다. 혼자서는 부끄럼이 커서 활동이 어려운, 심리적으로 위축된 퇴직 혹은 실직 중년 남성들이나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사회적으로는 고립되거나 외로운 중장년 남성들 등이 모여서 작업과 활동을 논의한다. 이곳에서는 자살예방을 포함해 건강한 중장년 남성들의 사회적 역할과 새로운 모델을 찾기 위한 토론이 이루어진다. 더불어 합창단·밴드 등이 결성돼 공연을 하거나,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작업을 해서 전시회를 하고 작품 판매를 하기도 한다. 이런 남성들의 공간 안에서 남성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새롭게 되찾기 시작한다. 그래서 아일랜드와 영국 등에서 나온 중장년 남성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타이틀로 돼 있다.



중장년 남성 자살예방을 위한 희망

우리는 중장년 남성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장년 남성 특성을 ‘성 역할’ 인지적 접근에서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와 도움의 요청을 들어야 한다. 더불어 중장년 남성이 겪는 인생의 큰 위기, 지위의 상실, 깊은 슬픔, 외로움과 사회적 단절에 대한 위협감, 노인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 등에 대한 이해 속에서 그들의 생명연장이 왜 어려운가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년 남성 친화적 공간의 필요, 중장년 남성의 사회적 지위를 위한 활동의 자리, 이것은 아주 시급하다.

50+세대의 돌봄, 돌봄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돌봄은 생존의 문제이다. 갓 태어난 신생아는 물론이고 질병이나 장애 또는 노화의 과정에서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인간은 돌봄에 의존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 대한 돌봄과 가족을 비롯하여 타인에 대한 돌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일시적이든 항구적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고, 다양한 형태의 돌봄을 경험한다. 돌봄 대상자이면서 제공자인 각자가 보편적이고 순환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서로 의존하는 돌봄관계의 특성에 대해 학자들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본질적인 관계’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 선언 이후 감염병 확산의 공포와 함께 돌봄 공백의 미증유 상황을 경험하였다.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한 위기 상황은 돌봄의 재가족화를 촉발하였고, 일상의 삶과 돌봄이 무너지면서 긴급돌봄 체계를 절박하게 요구하기도 하였다. 즉, 인구구조의 변화와 맞물린 감염병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돌봄의 역할과 의미는 더욱 확장되고 강력하게 우리 삶의 가까이로 다가선 것이다.

1차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와 대비되어 산업화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적 배경을 가진 세대라고 통칭되는 2차 베이비붐세대(1968~1974년생)의 개인주의적·탈권위적 가치관은 돌봄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까? 부모 세대가 가졌던 가족에 대한 맹목적 헌신과 의무감과 달리 ‘일-가정 양립’에 대한 양성평등 의식을 갖지만, 의식과 실제 행동의 차이로 인해 부부관계의 갈등을 초래하는 특징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적지 않다. 한편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중시 경향으로 가계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이에 따른 가계 부담이 큰 특징을 갖는 것으로 각종 실증 연구들이 밝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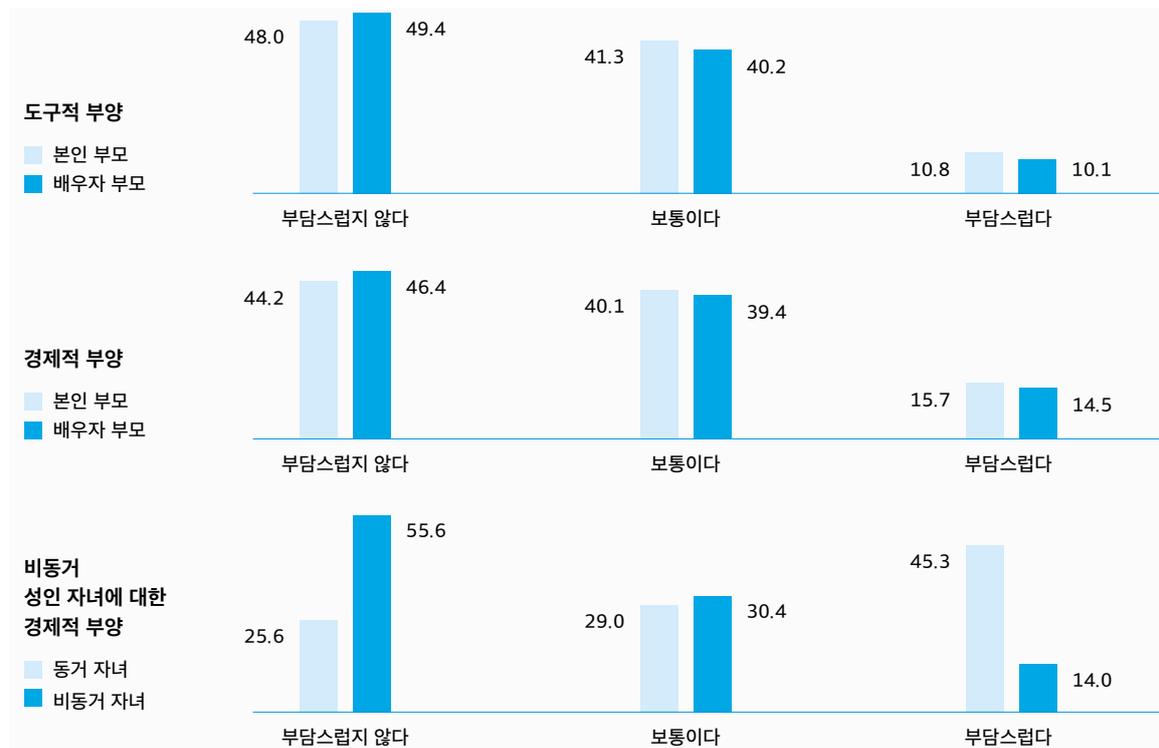
이들이 갖는 세대적 특징을 막론하고 중고령기는 돌봄관계에 있어 돌봄의 대상이 자녀 돌봄에서 노부모 돌봄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2차 베이비붐세대들의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로 노동시장 참여 형태가 변화하면서 노부모와 손자녀 또는 만혼·비혼의 성인 자녀 등 돌봄 대상자가 범위가 늘어났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부모의 돌봄기간이 길어지고, 자녀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담도 일부 떠안게 된 것이다. 30~40대 미혼자의 절반가량이 주거비 부담 등의 이유로 부모와의 동거를 선택하는 ‘캥거루족’의 증가도 이들에게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깁 세대(sandwiched generation)’의 일상을 현실로 경험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깁 세대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중년기 이후 노부모와 성인 자녀, 손자녀 등 동거·비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2

세대 이상의 가족원에 대한 부양의 부담을 일컬어 '이중 부양'이라고 한다. 여기서 부양은 돌봄과 비교하여 보다 협의의 구체적 돌봄의 방식으로서 경제적·신체적·정서적·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중 부양은 돌봄의 대상이 확장되면서 부담이 배가되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객관적이거나 주관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감이나 과도한 역할수행의 부담, 가족 갈등,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만성적 피로와 무력감, 외로움, 우울, 신체적·정신적 소진, 전반적 삶의 질 저하 등 부정적인 연구 결과들을 낳고 있다.

실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9년 실시한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에서 50~69세 대상으로 가족 부양부담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였는데, 우선 부모 동거 비율은 본인 부모와의 동거 비율이 8.1%, 배우자 부모와의 동거 비율이 4.6%였고 비동거 비율은 각각 91.9%(본인 부모)와 95.4%(배우자 부모)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비동거 본인·배우자 부모에 대한 부양 부담 정도를 아래 그림에 제시하였다. 이중 부양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들이 비동거의 노부모와 성인 자녀에 대한 도구적이고 경제적인 부양까지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신중년(50~69세)의 비동거 본인·배우자 부모와 성인 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



자료: 진화영. (2020). 신중년의 가족관계 현황과 향후 과제: 부양관계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통권 287호(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돌봄의 부담에 대한 실증적 결과물이 뒷받침하지 않더라도 돌봄 제공자로서의 경험은 단순 기술적 활동에 머물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면대면(面對面), 일대일의 관계에서 대상자와 제공자 간의 민감성(애정), 배려·존중·신뢰 등의 정서적 교감과 교류가 일어난다. 이러한 관계적 상호성으로 돌봄은 더욱 필수적이고 가치 있는 행위로 인식되는 것이다. 다만 서구 현대사회에서 돌봄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 귀결되지만, 한국에서 돌봄은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가족' 그리고 '개인과 국가' 등 다층적이고 복합적 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물론 개인과 가족에게 오롯이 남겨져 있던 돌봄의 과업은 경제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더는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다. 가족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가족구조와 기능이 변화하고, 여성의 유급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돌봄 욕구의 사회적 충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증폭되어 한국에서도 사회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돌봄 정책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돌봄을 이야기하지 않고 복지국가를 이해할 수 없고, 개인과 가족이나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본 원칙이면서 이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의 하나로서 돌봄을 이해하고, 국가는 돌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돌봄 문제가 핵심 사회 의제로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국가들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는 돌봄 정책이 비공식 영역의 돌봄을 단순히 기능적으로 대체할 뿐만 아니라, 돌봄 제공의 책임과 가치 그리고 돌봄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해석과 앞으로의 지향까지를 반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간의 돌봄 정책 논의는 주로 돌봄의 사회화에 따른 관련 서비스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보다 포괄적이고 전체주의적 맥락에서 돌봄의 가치와 의미를 재해석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법·제도적 기반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시도하고 공식·비공식 영역의 돌봄에 대해 재정적·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지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논의를 이전보다 활발하게, 보다 구체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돌봄 정책은 돌봄에 투입되는 재정적·감정적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노동력에 대한 서비스 지원방식이나 비용 분담을 위한 수당지원 또는 돌봄을 위한 시간적 투입에 대한 휴가지원 등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서비스 지원을 위한 노인장기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에서의 돌봄서비스가 대표적이고, 가정양육수당 등은 대표적 수당지원 방식이라 하겠다. 출산휴가제나 육아휴직제도는 시간적 지원의 형태인데, 돌봄의 사회화 정책이 확장되면서 가족에게 주어진 돌봄부담, 특히 이 시대의 중장년들에게 드리워진 이중 돌봄의 부담을 감당하거나 경감하기에는 그 관심과 지원이 역부족인 상황이다. 돌봄 정책의 기본 골격은 유급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에 가치를 강조하고 있었기에 한국적 정서에 뿌리 깊이 남은 가족중심의 돌봄은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화된 각종 돌봄서비스와 돌봄제도에도 불구하고 이중 돌봄의 부담, 자녀됨의 무게는 중년의 또 다른 위기로 다가오는 것이다.

2차 베이비붐세대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돌봄을 사회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로서 인식하고, 비공식 영역과 공식영역이 단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돌봄욕구를 충족해 나갈 수 있는 실효적 논의를 펼쳐야 한다. 돌봄 욕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돌봄 욕구는 갈수록 다변화되고 있으니, 그 비용 부담 또한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다. 이는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고 사회적으로도 돌봄 비용의 지속적 증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효적 돌봄 정책은 이용자-제공자-공급자 3자가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돌봄체계의 지속가능성과 돌봄의 준엄 및 품질에 대한 신뢰」를 돌봄 정책의 핵심 가치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돌봄서비스의 촘촘한 연계·협력을 통해 이용자 관점에서는 돌봄의 대상자와 그 가족이, 또 돌봄의 제공자와 공급자가 촘촘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유연한 협력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돌봄의 이용자-제공자-공급자의 다양한 의견은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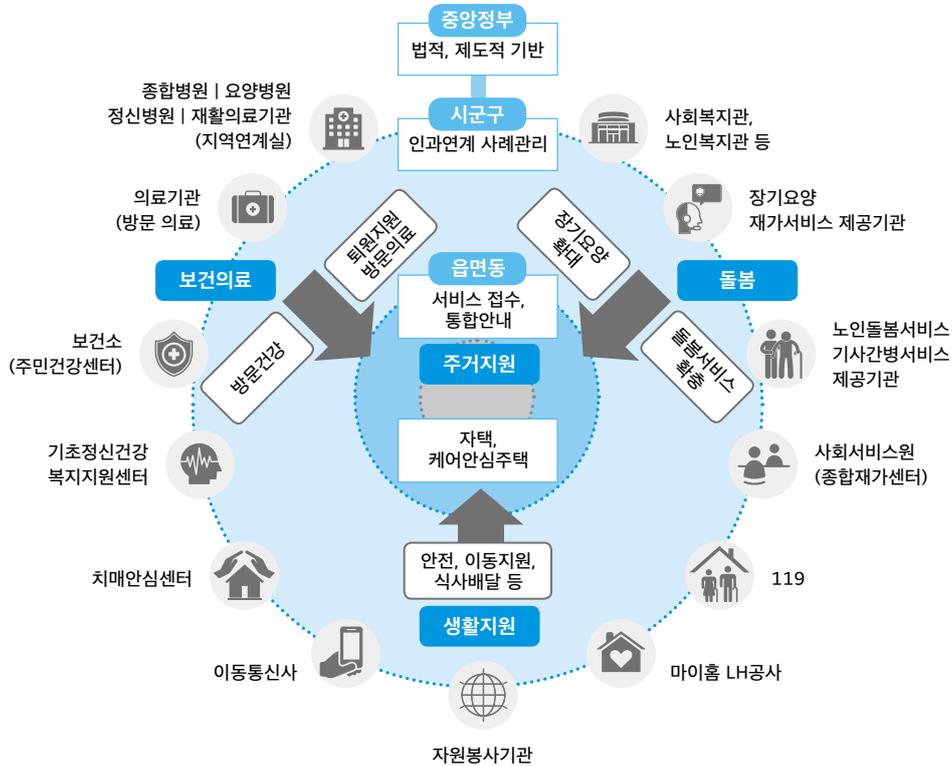
필요하다. 정부는 돌봄 플랫폼을 통해 돌봄 3주체가 언제든지 소통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건전한 집단활동 수준의 관리와 모니터링이 되어야 하며, 재정지원이나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이들의 다양한 의견과 평가는 수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돌봄의 대상자와 이용자 모두 인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 및 권리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전제해야 한다. 특히 돌봄환경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다른 어떤 환경적 조건에서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한편, 상대적으로 돌봄 제공자의 노동 가치가 저평가되고 적절한 처우가 보장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여 돌봄 노동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사회적 인정과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여야 이 모든 돌봄 논의가 가능한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커뮤니티케어와 50+세대

정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통합돌봄기본계획(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을 발표하며,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 로드맵과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2019년부터는 지역자율형 통합돌봄 모형을 만들기 위해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한 핵심적인 내용과 50+세대의 참여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¹란 무엇인가?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어르신,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의미한다. 요약하자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욕구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그림을 살펴보면, 그동안 분절된 서비스를 시군구와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적으

1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를 중앙정부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는 용어로 번역해 사용한다. 본 원고에서는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했다.

로 접수하고 안내한다. 즉 여러 곳을 돌아다닐 필요 없이 한곳에서 서비스 안내 및 연계가 가능하다는 애
기다. 구체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돌봄서비스 외 주거, 보건의료, 기타 생활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왜 도입했는가?

첫째,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가 그 이유다. 우리나라는 2026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그리고 가족구조 변화로 1인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노인가구 세 집 중에 한 집은 홀로
사는 노인가구라고 한다. 최근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서도 1인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둘째, 복지시설과 병원 중심의 비효율적 돌봄이다. 병원과 시설 중심의 의료,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쩔
수 없이 병원과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셋째, 탈시설 또는 탈병원 한다고 해도, 지역사회에서 마땅히 생활하기가 어려운 조건이다. 즉 사회의
돌봄체계 미비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적서비스, 서비스의 포괄성과 적절성 부족 등이 그 이유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의 실행을 위한 핵심 목표

중앙정부의 실행 목표로 주거지원 인프라 구축, 방문 건강관리 및 방문 보건의료 실시,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의 확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실행 목표로는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서비스 및 모형
개발, 대상자 발굴 및 연계 강화, 보건의료와 복지 간 통합 노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공적서비스의
확대는 중앙정부가,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은 지방정부가 맡는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의 실제 사례

지자체 ‘커뮤니티케어’의 실제 사례를 간단하게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와 응급
환자의 간병서비스 연계 사례다.

사례1 김해시 돌봄이 필요한 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목표	입원 순간부터 퇴원을 목표로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불필요한 입원을 예방하고 가정으로의 조기복귀를 지원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에서 ‘지역케어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주거지원, 방문 의료서비스, 장기요양, 가사서비스 등) 연계 • 퇴원 후 재가생활에 필요한 주거, 보건의료, 돌봄요양, 식사지원, 이동지원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
사례2 전주시 응급간병 지원 사업		
목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간병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긴급 간병서비스를 제공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및 재가 긴급간병서비스 제공[입원 후 7일, 퇴원 후 3일 지원(10일 범위 내)] • 서비스 제공과정 모니터링: 필요 시 타 서비스 연계 진행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와 50+세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아프기 전에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힐러리 코탐(Hilary Cottam)은 그의 책 '래디컬 헬프(Radical help)²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일과 학습, 건강과 활력, 지역사회공동체(관계)'가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요컨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지역사회에서 관계를 매개로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제안한다.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서 활력 넘치는 생활을 위해서는 자기주도성에 기초한 적절한 일과 공동체 활동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영국에서 50세 이상의 성인이 참여하는 '서클(Circle)' 프로그램이 그러한 예다. 주민들은 각자의 관심 중심으로 일종의 동아리를 구성한다. 노래, 산책, 공예, 뜨개질 등 어떤 것도 괜찮다. 여기서 핵심은 구성원 간 관계다. 그리고 그 관계에 기초해 주민들은 소소한 돌봄을 서로 간에 제공한다.

이는 50+커뮤니티 활동과도 유사하다. 커뮤니티 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2018년 '힘내라 홍제천' 강의를 듣고 '홍제천생활환경실천단'을 만든 사례가 있다. 이들은 서대문구 지역 내 홍지문에서 사천교까지 물길을 5구간으로 나누어 소개하는 지도를 직접 만들었다. 적당한 일과 건강(걷기) 그리고 관계는 삶의 활력을 돋운다. 이렇듯 50+세대도 일상 속에서 즐겁게 커뮤니티케어 활동에 동참할 수 있다.

2 '여기서 'Radical'은 '본질적인' 또는 '근본적인'의 의미로 쓰인다.

참고문헌

- 김승연 외(2018),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개념정립 및 추진방향」, 서울연구원.
- 보건복지부(2020),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북」.
- Cottam, Hilary, 박경현 역(2020), 「래디컬 헬프 -돌봄과 복지제도의 근본적 전환」, 착한책가게.

인터넷 사이트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common/searchPrint.do>
- 서울시50플러스포털 <https://50plus.or.kr/detail.do?id=1121511>

미국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전문직 간 교육(Interprofessional Education, IPE)

“

우리는 다양한 분야의 헬스케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으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서로 분리된 각각의 의료 분야에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대중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건 전문가 양성에 있어서 협업에 기반을 둔 팀 중심의 치료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일부 교육기관에서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지만 아직은 그것이 충분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중보건 분야를 아우르는 학제 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기에 이러한 혁신 노력을 앞으로 가속화해 나아가야 합니다.

”

George E. Thibault, M.D. President
Josiah Macy Jr. Foundation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전문직 간 교육(Interprofessional Education, IPE)은 의료직 전공 학생들이 환자 치료와 케어에 있어서 최상의 협력환경을 구축하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적 접근방식으로, 특히 노인 의학(Geriatrics)과 관련된 의료 교육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IPE의 기본적 가정은 헬스케어 전문가들이 협력적 관계에서 환자를 돌볼 경우 환자 케어의 질적 향상은 물론 전반적인 치료비용이 절감되고 환자의 치료기간이 감소하며,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역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공중보건협회(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등은 IPE를 장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 의학협회의(Institute of Medicine)는 “헬스케어 전문가들은 학제를 넘나드는 팀(Interdisciplinary team)의 구성원으로서 환자 중심 케어(Patient-centered care)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헬스케어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각자의 역할에 대해 잘 이해할 때 환자는 더욱 안전하게 질 높은 케어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전문직 간 교육(Interprofessional Education, IPE), 어떻게 시작되었나

IPE의 필요성은 1980년대 중반부터 국제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영국에서는 1986년에

Interprofessional Care 학회지가 처음 발간되었으며, 1987년에는 IPE 발전센터(Center for the Advancement of Interprofessional Professional Education, CAIPE)가 설립되었다. 또 캐나다에서는 2003년에 보건부에 의해 IPE(Interprofessional Education for Collaborative Patient-Centered Practice Initiative)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2005년 미국 약대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of Pharmacy)가 IPE 모델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IPE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체를 구성함으로써 대학들이 IPE 과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초석이 마련되었다. 이를 계기로 미국 전체에서 현재는 많은 대학 기관들이 학생들에게 IPE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 전문직 간 교육(Interprofessional Education, IPE)의 정의

IPE는 궁극적으로 협력적 학습환경을 창조하고 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각각의 분야로부터 구성된, 2인 이상의 헬스 관련 교육자 및 학생으로 조직되는 교육모델이다. 이 모델의 목표는 경쟁력 있는 헬스케어 팀의 구성원들을 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헬스케어 교육의 전체적인 커리큘럼 전반에 걸쳐 수직적이고 수평적으로 IPE가 제공되는 것이다. 헬스케어 분야의 학생들은 학업 과정의 초기에서부터 IPE를 통해 환자 중심 케어를 위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이 추후에 본격적으로 의료 분야 현장에서 일할 때에도 지속적으로 IPE를 통한 수련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 모델에서는 협의를 통한 의사 결정이 가치 있게 여겨지며, 각각의 팀 구성원은 그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참여자들은 IPE를 통해 통합적 의리지식과 스킬, 협력적 태도를 함양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환자 중심 케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 전문직 간 교육(Interprofessional Education, IPE)의 효과성

연구들에 의하면 IPE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최상의 협업에 기반한 최적의 치료기술을 함양하게 한다 (Charles Campion-Smith, 2011; Makowsky, 2009; Sargeant, 2011). 주요 IPE 효과성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 IPE 효과성 연구 결과

IFE의 예- 메릴랜드 주립대 Geriatric Assessment Interdisciplinary Team(GAIT) Project

메릴랜드 주립대(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노인의학·노년학 교육 및 리서치 프로그램(Geriatrics & Gerontology Education and Research Program, GGEAR)에서는 노인환자의 치료와 케어를 위한 학제 간 팀 기반 통합 교육 프로젝트(이하 GAIT)를 통하여 다양한 헬스 분야 전공 학생들에게 의학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요구 사항과 포괄적인 건강상태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고안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GAIT 프로젝트는 1994년부터 메릴랜드 주정부의 재정적 지원(Redeployment Grant System)하에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 노인의학·노년학 분야 IPE 프로그램이다. 메릴랜드 주립대학 시스템에 등록된 11개 대학의 건강 및 사회과학 학부, 대학원 및 전문 학위 과정(의학, 치의학, 간호학, 작업치료·물리치료, 청력학, 약학, 심리학, 음성언어병리학, 재활과학, 노년학, 사회사업, 법학 등) 학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GAIT 교육 과정은 메릴랜드 주립대학의 노인학·노인학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GGEAR)과 메릴랜드 지역 보건 교육 센터(Maryland Area Health Education Centers, MAHECs)가 공동으로 설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GAIT 프로젝트 참여를 통하여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기회를 갖게 된다.

- 인구 고령화 및 노인 인구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 노인의 삶과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증진
- 다양한 보건·사회과학 분야 학생 및 전문가와의 교류
- 노인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제 간 접근의 가치에 초점을 맞춘 팀 훈련
- 성인 데이케어나 장기 요양 커뮤니티 또는 병원과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인 건강 전문가와의 교류
- 환자 중심의 노인 평가 및 중재 계획 구성에 대한 실습
- 치료 팀 구성원으로서 활약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
- 노인환자 케어에 대한 태도 및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

매년 최소 10개의 GAIT 프로젝트가 개설되며, 학생들은 메릴랜드 전역의 승인된 교육제공기관 중에서 원하는 GAIT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다. 교육제공기관으로는 성인 데이케어센터, 생활 지원 커뮤니티, 의료 및 재활 병원, 호스피스 및 완화 치료 시설, 독립 생활 및 장기 요양 커뮤니티, 전문 요양원 등이 있다. 학생들은 팀에 배정되어 전문가 간 또는 세대 간 의사소통 기술을 강화하고, 노인에 대한 공감력을 높이며, 노인 치료 및 케어와 관련한 학제 간 접근 방식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고안된 활동에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1~2일에 걸쳐 각 교육현장에서 8~12시간 동안 진행되며, 주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인 데이케어센터, 노인 장기 거주 기관(Nursing home 등 Long-term care facilities) 교육현장 둘러보기
- 정상적인 연령 관련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 배우기 위한 연령 시뮬레이션 활동
- 환자 / 클라이언트 건강 및 치료기록 검토

- 노인환자에 대한 팀 관찰 및 인터뷰
- 관찰 및 인터뷰를 기반으로 하여 팀 토론 후 포괄적인 노인환자 치료 계획 수립 및 발표

최근 1년간 총 130명의 학생이 GAIT에 참여하였으며 참가자들은 물론 교수진 또한 GAIT 프로젝트의 가치와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학생A: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모든 일에 능숙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도요. 다른 교육 참가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장기적으로 향후의 직업현장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팀으로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B:

환자 치료를 위해 팀으로서 다른 의료 전문가와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팀워크가 환자 치료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A:

저는 학생들이 자기 전문 분야의 관점에서 환자를 이해하고 접근해 나가려고 하는 창의력에 매우 놀랐습니다. 저에게도 GAIT 프로젝트는 배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 전문 분야의 역할에 대해 이전에는 없었던 통찰력을 얻는 의미 있는 교육의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맺음말

진정한 의미의 환자 중심의 질병 치료와 케어(Patient-centered care)는 환자의 신체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환자의 심리적 상태나 가족의 돌봄과 같이 환자가 받는 사회적 지지와 지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할 때 실현할 수 있다. 특히 노인층의 경우 젊은 연령층에 비해 여러 가지 질환을 동시에 경험하기 쉽고 개인에 따라 치료에 영향을 주는 삶의 여건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와 케어에 있어서 통합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인환자에게 최적의 치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삶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각각의 환자에게 요구되는 치료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팀 기반의 치료모델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치료모델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활한 팀 기반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초석이 바로 IPE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IPE는 학생들이 노인환자 케어에 요구되는 다양한 접근 방식에 대해 미리 경험하고 팀 기반 협업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최상의 교육모델이라고 하겠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노인환자는 물론 그들을 돌보는 부양가족의 삶의 질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노인의학 분야의 IPE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Barr, H., Koppel, I., Reeves, S., Hammick, M., & Freeth, D. S. (2008). *Effective interprofessional education: argument, assumption and evidence (promoting partnership for health)*. John Wiley & Sons.
- Buring, S. M., Bhushan, A., Broeseker, A., Conway, S., Duncan-Hewitt, W., Hansen, L., & Westberg, S. (2009). Interprofessional education: definitions, student competencies, and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American journal of pharmaceutical education*, 73(4).
- Campion-Smith, C., Austin, H., Criswick, S., Dowling, B., & Francis, G. (2011). Can sharing stories change practice? A qualitative study of an interprofessional narrative-based palliative care course. *Journal of Interprofessional Care*, 25(2), 105-111.
- Geriatrics & Gerontology Education and Research Program at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https://www.umaryland.edu/gerontology/education-and-training/geriatric-assessment-interdisciplinary-team-gait-project/>
- Helitzer, D. L., LaNoue, M., Wilson, B., de Hernandez, B. U., Warner, T., & Roter, D. (2011).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communication training with primary care providers to improve patient-centeredness and health risk communication.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82(1), 21-29.
- Josiah Macy Jr. Foundation www.macyfoundation.org
- Makowsky, M. J., Schindel, T. J., Rosenthal, M., Campbell, K., Tsuyuki, R. T., & Madill, H. M. (2009). Collaboration between pharmacists, physicians and nurse practitioners: a qualitative investigation of working relationships in the inpatient medical setting. *Journal of interprofessional care*, 23(2), 169-184.
- Morey, J. C., Simon, R., Jay, G. D., Wears, R. L., Salisbury, M., Dukes, K. A., & Berns, S. D. (2002). Error reduction and performance improvement in the emergency department through formal teamwork training: evaluation results of the MedTeams project. *Health services research*, 37(6), 1553-1581.
- Sargeant, J., MacLeod, T., & Murray, A. (2011). An interprofessional approach to teaching communication skills.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the Health Professions*, 31(4), 265-267.
- Weaver, S. J., Rosen, M. A., DiazGranados, D., Lazzara, E. H., Lyons, R., Salas, E., ... & King, H. B. (2010). Does teamwork improve performance in the operating room? A multilevel evaluation. *The Joint Commission journal on quality and patient safety*, 36(3), 133-142.
- Zwarenstein, M., Reeves, S., Barr, H., Hammick, M., Koppel, I., & Atkins, J. (2000). Interprofessional education: effects on professional practice and health care outcomes.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3).

스페인 노인을 위한 대학, 주립 노인대학 프로그램협회 아에품(AEPUM)

스페인의 50+세대, 장년층의 교육을 위한 ‘주립 노인대학 프로그램 협회: 아에품(AEPUM: Asociación Estatal de Programas Universitarios para Mayores)’을 소개하고, 현재 협회에 등록된 한 대학에서 하는 50+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본다. 이들의 본질적인 목적은 대학 환경에서 보다 전문적 교육을 통해 장·노년층 중 대학 공부를 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대학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보다 학문적인 교육을 통해 일시적 취미활동을 넘어 심도있는 교육을 받은 시니어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배우는 것이 사는 것이다.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말라 (아에품의 한 파트너 대학이 내세우는 슬로건)

스페인 현재, 전체 인구의 약 19.58%[스페인 국가 통계청(INE), 2020년]에 해당하는 은퇴 이후(65년) 장·노년층 인구로 이루어져있다.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인 2019년 기대수명이 83.9세까지 치솟았으며, 2020년 기준 전 세계 평균 기대수명 6위(한국은 9위)로 노령화 사회의 대책이 절실한 국가 중 하나다.[출처: EnR?(시니어와 관련된 온라인 정보 웹페이지) 2020년 3월 보고서]

따라서 이제 장·노년층의 새로운 삶의 시작은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듯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하는 장·노년층을 위해 ‘보다 전문적 교육’을 위해 스페인 정부 및 사회적 단체들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앞으로 소개할 ‘주립 노인대학 프로그램협회(AEPUM: Asociación Estatal de Programas Universitarios para Mayores)’ 프로그램이다. 노령화 사회에 발맞춰 시니어 인력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자치주 대학들과 협력해 장·노년층을 위한 대학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아에품(AEPUM).

본 글에서는 해당 협회의 프로그램 및 파트너 대학 중 활동이 활발한 곳을 통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장·노년층 교육에 힘쓰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아에품(AEPUM)

1. 아에품 개요 ‘주립 노인대학 프로그램협회(AEPUM: Asociación Estatal de Programas Universitarios para Mayores)’

‘주립 노인대학 프로그램협회’는 공립 및 사립 대학뿐만 아니라 목적에 따라 노인을 위한 수준 높은 교육이 가능한 기타 지자체 단체들의 참여로 구성된 비영리 노인대학 단체다.

2004년에 설립돼 현 스페인 대학의 '노인을 위한 대학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지자체의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병행하며 25년 이상 노인을 위한 질 높은 교육을 위해 힘써 왔다. 보다 수준 높은 대학 환경에서 장·노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활성화해 노인 집단의 교육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다. 특히 취약계층 등 당시 대학 공부를 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언제든 늦음이 없는 배움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시니어 프로그램을 위한 대학 간 정보 공유 및 조언 센터 역할도 하고 있다.

스페인 전국 약 46개 대학에 6만 3000명 이상의 학생이 등록한 아에폼은 적극적으로 '회춘'을 촉진하며 장·노년층의 자신감과 독립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스페인 장·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가장 큰 협회다.

대부분의 학습 과정은 인문학 및 과학, 사회과학, 언어학, 심리학, 역사학 등의 기본 학문을 제공한다. 한국어로 치면, 일반 대학 신입생들이 듣는 전공 기본 혹은 교양 과목 정도의 수준으로 시작해 시니어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켜 평생학습을 촉진하고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주립 노인대학 프로그램협회(AEPUM) 회의.
출처: AEPUM twitter

2. 아에폼의 주요 활동

1) 파트너 대학들 관리 및 조율

스페인 전역의 대학에 해당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하고, 제휴 신청을 받아 지역별로 필요성과 자격이 되는 대학들로 엄선해 해당 프로그램을 숙지시키며, 자율은 주된 파트너 대학 간의 혼란이 없도록 기본적으로 공통적 시스템을 가질 수 있게 한다.

2) 각 대학 프로그램의 내용을 공유하는 총회 개최

1년마다 파트너 대학들의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각 대학 해당 프로그램의 담당자, 교사, 행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총회를 연다. 총회는 공식적 설립 이전인 1996년부터 시작됐다.

3) 시니어 교육 방법론에 대한 세미나 개최

평균 1년에 서너 번 시대에 발맞춰 발전된, 효율적인 시니어 교육 방법론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있다. 보통 주제는 지역별 대학들이 돌아가며 각자의 모범 교육 사례 등을 발표한다. 코루냐 대학의 ‘노인을 위한 대학 프로그램에서 ICT 사용’ ‘노인을 위한 대학 프로그램의 세대적 다양성을 위한 노력’ ‘노인을 위한 대학 프로그램의 수학·과학 교육’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국내 및 유럽 혹은 국제 콘퍼런스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4) 다양한 국제 연구 프로젝트 실시

시니어 교육에 조금 더 학문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주변 독일·프랑스 등 유럽연합 국가들과 국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주된 주제는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장·노년층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학습’으로, 계속해서 화두가 되는 장·노년층의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시니어 IT 학습법을 마련하려는 등의 프로젝트다. 이 외에도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다양한 협회와 교류하려 힘쓴다.



주립 노인대학 프로그램협회(AEPUM) 회원들이 포르투갈 리스본 대학을 방문했다.
출처: AEPUM twitter

노인을 위한 대학(AEPUM 파트너 대학 알메리아 대학교의 프로그램)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주립 노인대학 프로그램협회(AEPUM)의 대변인이자 알메리아 대학교 노인대학 사무국장 안토니오 코디나 산체스(Antonio Codina Sánchez) 씨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다.

1. 알메리아 대학의 노인을 위한 대학(Universidad para mayores de UAL)의 목표

아에폼의 46개 파트너 대학 중 하나인 알메리아 대학교(UAL: Universidad de Almería)는 스페인의 남쪽 안달루시아주에 있다. 안달루시아는 스페인 전국에서 가장 많은 9개의 대학이 아에폼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이다. 1998년에 시작한 알메리아 대학의 ‘장·노년층을 위한 대학’은 55세 이상의 중·

장년층에게 과학·사회과학·인문학 등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교육을 제공해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세대 간 유연한 관계를 형성해 노년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타파하고자 한다.



알메리아 대학교의 노인을 위한 대학 프로그램.
출처: <http://www.umayores.es/>

2. 알메리아 대학의 노인을 위한 대학(Universidad para mayores de UAL)의 세부사상

1) '노인을 위한 대학(Universidad para mayores)'의 커리큘럼

수업은 주중 2일 2시간씩 부담 없이 이루어지며, 매년 11월 시작해 5월에 끝난다. 이것을 한 학년 수업(2학기)으로 본다. 평생교육이란 취지에 맞게 취미처럼 '한 학년 안에 수업을 끝내야 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이 걸려도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과목 중심으로 코스를 나눴다. 인상적인 것은 전체 교육 과정을 10년이라는 긴 기간으로 보고, 1000시간의 수업 시간에 40개의 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물학 수업(왼쪽)과 과학 수집품 센터 방문(오른쪽)

따라서 코스 내 과목을 골라 해당 과목을 이수하는 개념으로 일반 대학처럼 수업이 이루어진다. 첫 번째 학기는 기본지식 과정(공학, 과학, 건강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법률과학)으로 돼 있고, 두 번째 학기는 더 특화된 과정(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의 전문화된 과정)으로 되어 있다.

정규 과정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컴퓨터, 합창단, 연극, 내러티브, 언어 등과 같은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고 워크숍당 50~80시간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졸업장도 수여되는데, 각 학기가 끝날 때 일반 대학의 졸업식처럼 거행되고 대학 총장, 안달루시아 주청장, 알메리아 시장 등이 수료식에 참석한다.



노인을 위한 대학 학기 수료식 모습

2) 공연, 전시, 책 출판까지... 완벽한 워크숍의 결과!

워크숍에서는 연극·음악·춤 등의 다양한 과목들이 마련돼 있는데, 단순한 취미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 실질적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까지 수업의 심도가 깊다. 직접 배우·연출가·극본가가 돼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졸업식이나 '국제 노인의 날'(10월 1일) 행사의 무대에서 직접 공연(연극·합창)을 하며, 별개로 지역의 요양원·학교 등에서 자발적으로 공연을 할 수도 있다.



노인을 위한 대학 워크숍 수업 후에는 공연(합창, 연극)을 하거나 책이 출간되기도 한다.

단순히 여가적인 목적보다 직접 무대를 계획하고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역동성과 추진력을 강화해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문화적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특히 작문 워크숍을 통해서 학생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 출판되기도 한다.(현재 4권이 출판되고 5권은 인쇄 중)한편 대학 측에 따르면 외국어(프랑스어·영어) 등 언어과정은 가장 수요가 많은 수업이라고 한다.

3) 세대와 세대가 만나는 확장 교실

워크숍 외에도 세대 차이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있다. 이는 노인을 위한 대학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알메리아 일반 대학과 이어진 프로그램으로, 알메리아 대학 학생들과 노인을 위한 대학 학생들의 두 경계를 허물어 세대 간 배움의 기회를 열고 있다. 더불어 ‘확장된 교실’ 프로그램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지역 사회 안에서 세대 간의 사회적 교류를 증진하고 배움의 다양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 중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암비오블리츠(AmbioBlitz)가 있다. 앞으로 자연과 공존해야 하는 인간의 삶을 생각하며 만든 생물 다양성 활동이다. 블리츠(Blitz)는 ‘생물 다양성 마라톤’이란 뜻으로, 지역의 한 곳을 탐방해 가능한 한 많은 종의 생물을 찾아 특정 시간 동안 등록하는 행위다. 따라서 누구나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고 대학 내의 전문 교수들이 종의 구분을 돕거나 해당 생물의 생태 공부를 도와준다.



세대와 세대 간의 만남, 확장된 교실 모습

코로나19 이후에는 다시 대면 활동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해당 활동은 단순 기록에서 끝나지 않고 강연, 관련 영화 관람 등 다양한 액티비티도 포함돼 하루이틀 동안 연속으로 진행된다.

4) 이외 프로그램 및 미래 계획

이 외에도 현재 안달루시아주의 지원하에 시니어 라디오 프로그램인 ‘더 알고 싶어요(QSM: Quiero Saber Más)’도 운영하고 있다. 대학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주당 6시간의 새로운 교육 모듈이 설계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신체 및 스포츠 운동(3시간), 요가(2시간), 정서적 웰빙을 위한 심리학 워크숍(1시간) 등 신체 및 정서 발달에 맞춘 교양 교과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외 재판을 참관하고 나중에 판사의 마스터 클래스를 받는 것과 같은 보다 흥미롭고 활동적인 수업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5)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수업 및 학생 수

노인을 위한 대학 학생들의 연령대가 55~95세인 점을 감안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2020~2021년 수업은 화상교육으로 진행됐다. 다음 2021~2022학년도에는 스페인 정부의 계획대로 학생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게 되면 대면 교육을 재개할 계획이다. 워크숍을 포함하면 1,000명에 가까운 700명 이상의 학생이 등록해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을 위한 대학에서 언어 공부에 열중하는 학생들

6) 새로운 배움과 삶의 시작, 가장 행복한 학생들이 있는 곳, 노인을 위한 대학
노인을 위한 대학은 장·노년층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곳에서 배울 수 있는 시니어에게 가장 열려 있는 교육 공간이다.

이에 대해 알메리아 대학교 노인대학 안토니오 코디나 산체스 사무국장은 “우리 교실이 배우고, 사회화하고, 정신을 깨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난 5년 동안 알메리아 대학의 ‘노인을 위한 대학 프로그램’ 해당 과목의 전문가인 교수진이 참여해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보여주며 학생들의 만족도가 4.4 이상으로 전체 알메리아 대학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지역 사회에서 수여하는 상도 두 차례나 받았다.

이 밖에 노인을 위한 대학 프로그램은 해당 프로그램 동창생 및 교사진 커뮤니티와 협력해 고령화 사회에 ‘쉽’보다는 ‘활동’을 추구하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는 ‘문제’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도래’라 생각하며, 이들이 훗날 필수적 인력이 될 수 있게끔 하고자 좀 더 수준 높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장·노년층에게 제시하기 위해 많은 학문적 연구도 하고 있다.

‘노년층’이 아닌 새로운 ‘시니어 인재’

스페인의 인적자원 관련 온라인 신문 ‘RRHH Digital’은 “65세 이상 10명 중 8명이 다시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현재와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 55세 이상은 ‘노인’이 아니다. ‘준비된 인재’다. 따라서 사회가 이를 받아들이려는 준비를 서둘러야 할 시점으로 이들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체계적 커리큘럼과 양질의 교육을 선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 사회 역시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은퇴 후 세대가 급격히 늘었다. 예전과 달리 현대의 ‘노년층’은 몸과 마음이 튼튼하다. ‘인생은 50부터 시작’이라는 말처럼,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에 선 50+세대. 주립 노인대학 프로그램협회에서 말하듯 이들에게 필요한 건 휴식보다는 활동,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다. 지금의 50+세대는 지금껏 생계를 위해 욕구가 아닌 필요에 의해 원하지 않은 학습을 했던 세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은퇴 후 혹은 은퇴 준비를 시작하며 정말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아니면 '노인을 위한 대학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것처럼 기본지식 함양 수업을 다양하게 들어보며 자신이 어떤 것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 또한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연륜과 성숙의 나이에 시작할 수 있는 '진정한 학습', 앞으로 이를 원활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은 물론 공·사 기관이 협력한 좀 더 확고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는 인생의 또 다른 시작 앞에서 나이듦을 인식하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데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다. 50+,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절대 늦지 않은 시기다.

자료출처

- 주립 노인대학 프로그램협회[아에퐁(AEPUM)]
<https://www.aepum.es/presentacion/>
- 알메리아 대학의 노인을 위한 대학
<http://www.umayores.es/>
- 스페인 국가 통계청(INE)
<https://www.ine.es/jaxiT3/Datos.htm?t=1488 - ltabs-mapa>
- EnR?(시니어와 관련된 온라인 정보 웹페이지) 2020년 3월 보고서 : informesEnvejecimiento en redEnR?(뛰어쓰기) Número Un perfil de las personas mayores en España 2020 25, Marzo 2020
<http://envejecimiento.csic.es/documentos/documentos/enred-indicadoresbasicos2020.pdf>
- RRHH Digital 신문: 기사 제목: 'Ocho de cada diez mayores de 65 quisieran volver a estudiar(65세 이상 노년층, 10명 중 8명이 다시 학업에 돌아가고 싶어 하다.)' 2020년 11월 24일
http://www.rrhhdigital.com/secciones/formacion/144461/Ocho-de-cada-diez-mayores-de-65-quisieran-volver-a-estudiar?target=_self